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2년 봄호
Vol. 30



국가회계 동향

제22차 OECD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재정통계 동향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공익법인회계 동향

「2020 공익법인 재무 현황」 발간

CONTENTS

2022년 봄호

Vol. 30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정통계

VOL. 30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2년 봄호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265(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2년 3월 31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국가회계 동향

- 04 제22차 OECD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 19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4개국 결산보고서 소개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38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41 2022년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재정통계 동향

- 48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 55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및 결산 일정



공익법인회계 동향

58 「2020 공익법인 재무 현황」 발간

세미나

- 86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 93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오피니언

78 공공회계의 회계책임성 확인을 위한 육하원칙

센터 동향

82 제1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도 국가회계재정통계 사업계획 수립 · 보고

공지사항

101 뉴스레터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회계 동향



- 제22차 OECD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4개국 결산보고서 소개

01 제22차 OECD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가. 회의 개요

OECD는 지난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Conference Center에서 「제22차 OECD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22nd Annual 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n 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¹⁾를 개최하였다. 이 연례회의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과 활용, 공공재정관리의 개혁과 관련된 사례를 OECD 회원국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는 총 8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이틀간 대면·온라인 회의로 동시 진행되었다.

1) OECD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Annual meeting of OECD Senior 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 Officials)는 OECD 회원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및 활용, 공공재정관리 개혁 등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회의로 2001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제16차 회의까지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으로 명칭으로 운영된 바 있다.

세션	주요 내용
Session 1	코로나19 재정적 대응이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에 미친 영향 공유
Session 2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개혁 - 국가별 업데이트 국가별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관련 개혁(현행 또는 계획) 소개
Session 3	“녹색(Green)”이란 무엇인가?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무, 정책적 의무 이행을 위해 구축된 체계, 해당 체계 운영 경험에 대한 질문 논의
Session 4	녹색예산기법: 시작부터 끝까지 OECD 회원국 간 녹색예산의 최근 발전사항 소개
Session 5	기준제정활동 보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및 자문위원회(CAG),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유럽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EPSAS)의 기준제정활동 보고
Session 6	재무보고 - 누구를 위한 보고인가? 정부재무보고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관점 소개
Session 7	지출 트렌드 OECD 사무국이 준비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국가 총지출과 지출항목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출 트렌드(Spending Trends)” 보고
Session 8	OECD 사무국 보고 OECD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관련 업무계획 보고

연례회의 발표자료 및 관련 보고서 등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ecd.org/gov/budgeting/workingpartyofseniorbudgetofficialssbo.htm>



나. 주요 내용 요약

다음은 OECD 연례회의 중 세션 1과 세션 6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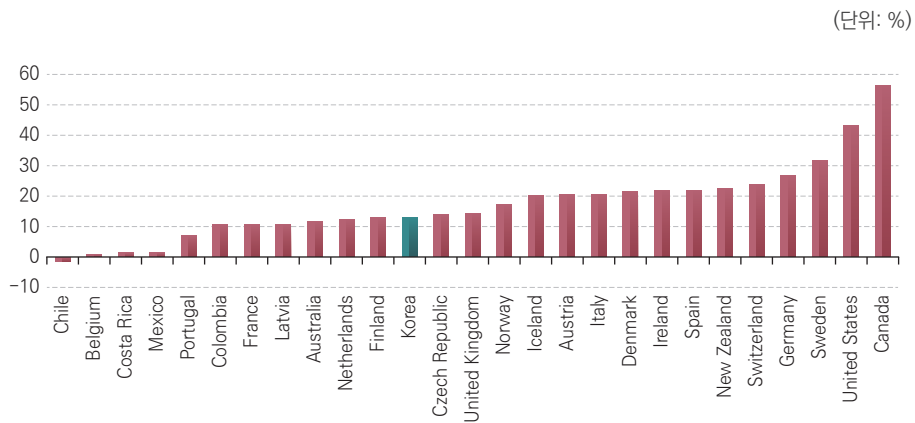
▶ 세션 1 코로나19 재정적 대응이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 (발표 1: OECD 사무국) 코로나19 재정적 대응이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는 공공재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피해 지원과 추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표 정책(지급보증, 용자 등)이 확대되어 이로 인한 우발부채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부채 연장 및 감면으로 인한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공공재정은 큰 영향을 받았다.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별로 정부지출이 현저히 늘어났으며, 캐나다, 미국, 스웨덴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한국은 16번째로 정부지출의 증가가 OECD 국가에 비해 낮음).

그림1 2020년 정부지출 증가 현황(2019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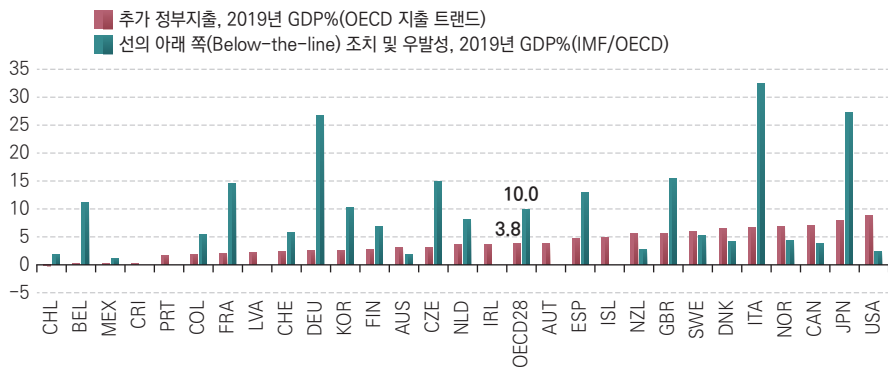
주: 2019 일정한 CLU상 2019년 정부지출 %(As a % of 2019 national government expenditure at 2019 constant CLU)

출처: OECD, National Government Expenditure in 2020 & 2019.

선의 아래 쪽 거래(below-the-line²⁾ 금융자산의 순취득과 부채의 순부담 등과 같은 거래를 의미하며, 선의 위 쪽 거래는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는 재정지출과 관련이 높은 항목으로 구성됨) 및 우발성 지출은 정부보증, 용자와 같은 정부의 재정상태표 정책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이며, 정부지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된 국가가 많이 보인다. 가장 크게 늘어난 국가는 이탈리아, 일본, 독일 등이다.

그림2 2020년 추가지출 구조(2019년 GDP % 대비)

(단위: %)



출처: OECD, 『제22차 OECD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발표자료집』

이와 같은 현상은 재정관리 및 회계책임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 (1) 기존의 예산 절차에서 벗어나 있음을 시사
- (2)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off-budget) 재정활동의 모니터링 강화와 재무보고의 필요성
- (3) 우발부채, 충당부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무보고의 필요성
- (4) 기존의 재정위험 평가에 대한 재평가
- (5) 기존의 재정규칙의 재설정

2) “선의 아래 쪽(Below-the-line)” 거래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자산과 부채의 형성을 의미한다. 예시로,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용자 또는 출자 등이 있다. 재정보고서에서 이러한 거래는 재정 잔액 아래에 있는 금융자산의 순취득으로 기록된다(출처: Glossary in: Fiscal Monitor, 2020).

● (발표 2: 영국 재무부) 코로나 재정적 대응-영국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개혁

예산책임청(OBR: 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은 공공부문 재정상태표에 대출, 출자, 표준화 보증의 변화가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위험 및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 예측했다.

영국은 재정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도입하여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의 비중을 점차 낮추고 순투자를 GDP 대비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공공부문 순채무, 공공부문 순금융부채, 공공부문 순가치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재정상태표 강화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경제·재정전망 2021.10」을 통해 표1과 같이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개입과 관련된 현재 재정상태를 요약하여 보고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출자, 보증, 보험 제도와 관련된 재정 사건에 대한 새로운 보고방식으로 팬데믹 관련 재정상태표 개입의 최대 총/순현금흐름, 우발부채의 추정 예측치 등을 제공한다.

표1 팬데믹 관련 재정상태표 개입의 총/순현금흐름

(단위: 십억파운드)

Table B.2: Gross and net cash flows of pandemic-related balance sheet interventions

	£ billion										Total
	Equity	Guarantee schemes					Indemnities & insurance				
	FF ¹	CBILS ¹	CLBILS ¹	BBLs ¹	RLS ¹	MGS ¹	UKEF ¹	CCFF ¹	TCR ¹	Other ¹	
Scheme status	Closed	Closed	Closed	Closed	Open	Open	Open	Closed	Closed	Open	
Maximum scheme size	2.3	26.4	5.6	47.4	2.5	-	10.0	38.0	10.0	1.6	143.8
Maximum gross liability	1.1	21.1	4.4	47.4	1.9	3.9	10.0	38.0	9.0	1.5	138.4
Latest gross liability ²	1.1	18.7	3.3	44.9	1.2	0.0	6.8	3.4	9.0	0.8	89.2
Expected write-offs ³	0.5	2.4	0.4	19.7	0.2	-	0.0	0.0	-	-	23.1
Net cash outlays	1.1	0.7	0.0	0.6	0.0	0.0	0.0	0.0	-	0.0	2.4
of which:											
Cash outlays to date ⁴	1.1	0.8	0.0	0.6	0.0	0.0	0.0	0.0	-	0.0	2.5
Cash received to date	0.0	0.1	0.0	0.0	0.0	0.0	0.0	0.0	-	0.0	0.1

¹ These are the Future Fund (FF),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CBILS), Coronavirus Large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CLBILS), Bounce Back Loan Scheme (BBLs), Recovery Loan Scheme (RLS), Mortgage Guarantee Scheme (MGS), UKEF Temporary Covid Risk Framework (UKEF), 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 (CCFF), Trade Credit Reinsurance (TCR) and 'Other' including the Events Reinsurance and the Film and TV Production Restart schemes.

² Figures for CBILS, CLBILS and BBLs do not include standard monthly repayments that also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latest gross liability.

³ Expected write-offs for CBILS, CLBILS and BBLs are presented as an estimated cash figure, as opposed to the discounted figures presented elsewhere in this document.

⁴ This comprises both cash paid when guarantees are called and other cash outlays, including the cost of paying borrowers' interest for 12 months at the start of the CBILS and BBLs loan guarantee schemes.

출처: 예산책임청, 「경제·재정전망보고서」, 2022.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영국의 재정관리 강화의 또 다른 움직임은 예산에서 신규 승인된 우발부채의 투명성을 제고한 부분이다. 새롭게 출범한 우발부채 중앙관리단

(CLCC: Contingent Liability Central Capability)은 향후 제도를 개발하는 각 부처에 신용 및 보험 관련 전문성을 제공한다. 우발부채 중앙관리단은 정부 전반에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기존에 공시된 우발부채를 검토하고, 모니터링과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통해 우발부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우발부채 공시를 주도한다.

● (발표 3: 프랑스 공공재정부) 코로나19 위기 긴급대응 재정관리 및 모니터링

프랑스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긴급대응에 다음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재정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1) 건전한 재정프레임워크 사용

프랑스 정부의 모든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은 절차의 간소화 없이 기존 위기대응 관련 법적 절차를 따라 집행되었다. 이는 재정지원의 신속도도 중요하지만, 재정과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지원 항목에 대한 보고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의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그들의 세금이 위기 대응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릴 수 있었다.

(2) 일반적인 회계정보 활용 증가와 그 실제 사례

정부 일반적인 회계정보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여 고위 공직자가 주로 활용하는 예산 데이터와 더불어 회계 데이터의 활용도도 증가했다. 재무 정보 산출과 관련된 내부 통제도 원활히 이루어졌다. 긴급히 제공되어야 하는 코로나19 재정지원이지만 관련 비용이 적절히 측정되었으며,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입함으로써 정확한 보고가 산출되었다.

연대 기금(Solidarity Fund) 사례

연대 기금을 통해 위기상황에 있는 기업에 연속적인 보조가 이뤄졌다. 이러한 조치는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20달 동안 387억유로, 한화 약 52조원)을 끼쳤으며, 지원 자격이 부여된 후 실제 지급은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연말에 예산 데이터를 결산하는 시점에 이러한 자연사항으로 인한 단기적 재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이 인식된다.

- (1) 결산일 현재 보조금 지급이 승인되었지만 지출되지 않는 항목은 비금융부채로 인식,
- (2) 결산일 현재 보조금 지급 관련 예측은 충당부채로 인식

주정부보증융자(State-Guaranteed Loans) 사례

주정부보증융자(state guaranteed loans)의 경우 이례적인 큰 규모(3천억유로, 한화 약 402조원)의 보증으로 일부 중소기업에 특정하여 지급된다. 보증이 지급되는 시점에 지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무를 식별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정부보증융자는 연말에 다음과 같이 인식된다

- (1) 위험에 대한 총당부채 인식(채무 불이행 예측치 반영),
- (2) 해당 재정상태표 기반 의무에 대한 평가(최대치로 측정, 우발의무로 인식)

(3) 예외적 조치에 대한 특정 보고서 작성

관리 및 모니터링에는 신속하게 작성되는 임시 보고서가 활용된다. 예산과 일반회계는 동일한 분석 접근법을 적용해 통합된 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산출되며 이는 정보에 대한 수요와 필요를 충족하는 신속한 보고를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명료하고 간결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20 정부회계에 미친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주제로 한 “4 pages”³⁾ 보고서를 발간하고, 보고의 대상(정부, 의회, 시민)을 세분화하여 보고서의 개요를 제공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한 사례를 통해, 최근 직면한 보건 위기는 정부 대응의 관리, 통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 개선의 중요한 예시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 (발표 4: 포르투갈 감사원) 코로나19 재정적 대응이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신속한 정부 대응은 위험을 수반하고, 현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대응에 대한 정보는 통합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시행된 정책과 이행방안에 대한 즉각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세부적이고, 완전하고, 철저히 작성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부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3)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comptes-de-letat>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포르투갈 감사원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예외적 제도가 적용되어 작성된 계약사항 모니터링
- 위기관리(코로나19)에 활용된 공공자원으로 인한 위험 보고
- 팬데믹 이후 최초 3개월간 코로나19 조치와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
- 코로나19가 보건 시스템과 접근성에 미친 영향
-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돕기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 감사
- 코로나19 조치가 지방정부 실체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 -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실업 현황
- 코로나19 - 예산 집행, 채무, 보증
- 예산 집행 정보 보고서(2개)

(보고의 목적) 감사원은 위에 나열된 보고서를 통해 신규 지출 조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예산서상 코로나19 대응의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고, 정부 개입에 대한 보고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공공정책 결정의 근거를 분석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며, 정부개입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검사 촉진을 도모한다.

(문제점) 현행 재정관리와 재무보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1) 추경안에 포함된 의회의 제안사항이 예산의 수입 및 지출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음
- (2) 사회 공헌금 납부 면제로 인한 수입의 손실에 대한 예산 산출액(Budget Outturn) 추정이 각 서비스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아 관련 수치 검증이 어려움
- (3)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지출을 식별하기 위해 수립된 예산에 팬데믹 이전 착수된 매입 절차와 관련된 39%의 지출(2억 7천만유로, 한화 약 3,616억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포함되지 않은 지출에 대한 정보는 보충보고서를 통해 공시)
- (4) 예산처리와 관련하여 지시사항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같은 성질의 보조금이 각각 다른 예산으로 수립됨

재정부는 예산 집행의 보고와 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신규 지침을 2021년 7월 17일에 발표했다. 해당 신규 지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및 사회 재건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보 수집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긴급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코로나19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시간과 운영상의 압박과 경제적 상황의 높은 불확실성은 사전에 지출 승인을 받아야 했던 예산 절차에 변화를 초래했으며, 코로나19에 특정한 추가경정예산법 또는 관련 예산입법 등이 승인되었다. 코로나19 지출에 대한 회계규칙 또는 기준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예산계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회계책임성을 제고했다. 포르투갈 감사원은 시민을 위한 정보의 접근성, 신규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의 중요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중대한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 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 세션 6 재무보고 - 누구를 위한 보고인가?

● (발표 1: OECD 사무국) 재무보고의 정보이용자

원칙적으로 재무보고는 정보이용자를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보이용자는 추가하거나 제거되어야 할 정보 식별과 정보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재무제표 개혁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재무보고에 대한 영국 의회 토론문에는 “일반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재무보고는 의회와 정보에 정통한 논객들, 아마도 많은 유권자들에게 정부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소비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좋은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것에 찬성한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회는 익숙한 보고 형식을 선호하고 새로운 형식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한다.

재무보고를 읽어야 할 정보이용자에는 입법부, 행정부, 전문가, 기자, 시민, 신용기관, 비정부기구 등이 있다. 현재 입법부 내 정보이용자에 대한 다수의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 정치권의 논의는 재정상태표보다는 주로 전통적인 예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법부 외 정보이용자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았다.

재무보고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 요소로 신속한 보고, “한눈에 보는”(정보 간소화) 발간물, 요약본 및 지리위치 어플(Geo-locational apps)⁴⁾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이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1) 재무보고에서 정보이용자가 활용하는 부분과 활용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 (2) 모든 정보이용자에게 동일한 정보가 필요한가?
- (3) 얼마나 빨리 재무정보가 필요한가?

● (발표 2: 오스트리아 의회예산국) 재무보고에 대한 의회구성원의 요구사항

의회 구성원(MP: Member of Parliament)은 정부재무정보의 주요 수신인이다. 재무정보 이용자로서의 의회 의원의 특징으로 이들은 다양한 배경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재무정보를 선호한다. 재무보고에 포함된 수치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요구하며, 그들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재무정보에 관심을 가진다. 재무재표보다는 예산서에 더 관심이 있으며, 재정상태표 정보 중 공공채무에 주목한다.

발생주의 재무정보가 포함된 예산심의 과정에 활용되는 자료로 연간예산(Annual Budget), 예산집행보고서(계속보고), 재무제표, 신규 법안의 영향 분석 및 내부평가 보고가 있다. 의회에서 상기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이한 개념(현금주의, 발생주의, 유럽국민계정체계(ESA))은 공공자원의 활용과 소비에 대한 추가적이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회구성원(MP: Member of Parliament)이 어려움을 토로한다. 각 정보에 대한 설명과 분석에 대해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된 “알기 쉬운(easy-to-understand)” 요약본이 필요하다.

4) 지리위치 어플(Geo-locational apps) 활용 예시: 주변에 신규 조달 사업이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

- (발표 3: 신용평가기관-무디스(Moody's)) 재무보고
 - 신용평가기관의 관점에서 보고의 대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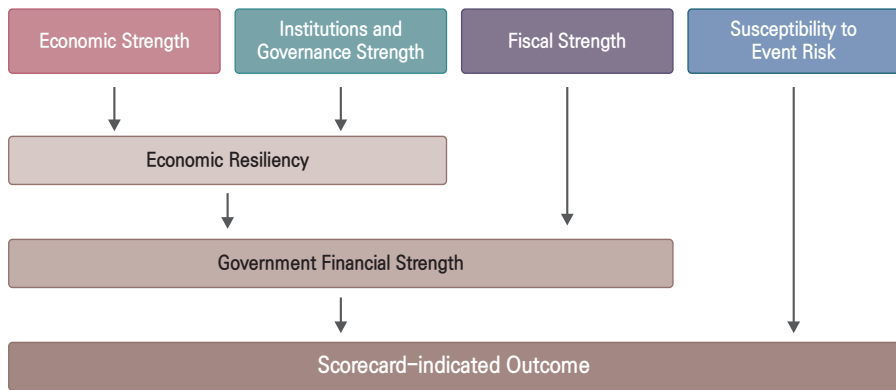
본 세션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부문 재무정보의 주요 작성자 또는 이해관계자인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정보이용자의 관점을 소개한다. 정보이용자의 관점 소개 첫 번째로 무디스 국가위험그룹(Sovereign Risk Group) 선임 부사장인 사라 칼슨(Sarah Carlson)의 국가별 신용등급평가 과정에서의 재무보고 활용이 소개되었다.

무디스의 국가별 신용등급평가 접근법은 크게 네 가지 분야를 평가한다.

- 1) 경제적 강점(Economic Strength)과
- 2) 제도적 강점(Institutions and Governance Strength)은 경제 회복력을 통해 평가하고,
- 3) 재정적 강점(Fiscal Strength)은 경제 회복력과 정부의 재무적 강점을 통해 평가하며,
- 4) 리스크 민감성(Susceptibility to Event Risk)은 스코어카드 결과(Scorecard-indicated Outcome)를 통해 평가한다.

무디스에서 활용하는 스코어카드는 예측 정보와 과거 데이터의 통합을 기반으로 하며 디폴트 예측에 능하다. 스코어카드는 3단계(three-notch ranges)의 평가척도를 제공한다. 스코어카드의 결과로 산출된 등급은 미래 상황을 예측하며 정성적 및 정량적 요인을 반영한다.

그림3 국가 신용 품질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



출처: OECD, 『제22차 OECD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발표자료집』

1) 경제적 강점(Economic Strength): 경제구조가 얼마나 강한가?

경제적 강점은 국가의 충격 흡수 능력을 반영한다. 중기적으로 세입과 서비스 부채를 창출하는 국가의 능력은 경제성장과 번영 촉진에 달려 있다.

경제적 강점의 지표 / 스코어

- 동적 성장(growth dynamics) (평균 실질 GDP 성장률, 변동성)
- 경제 생산규모(명목 GDP)
- 부(wealth) (1인당 국내총생산, 구매력평가(PPP))

2) 제도적 강점(Institutions and Governance Strength): 각 제도의 건전성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과 의지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경제적 강점의 지표 / 스코어

- 제도의 품질(정성적 분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견고한 입법제도와 행정제도는 신용도 제도의 주요 원동력이다. 사법부와 시민사회의 힘은 입법자/임원에 대한 견제 역할이며, 법치를 집행하고 부패를 통제하고 규범을 강화하며,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 정책 효과성(정성적 분석)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채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이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채무의 적정성 향상). 견고한 통화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은 불균형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채무보고와 제도적 강점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높은 이해 가능성과, 적시성, 정부 전반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품질을 제고하며, 데이터 제공의 독립성 또한 중요하게 간주된다.

높은 품질의 공시체계를 보유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월간 예산항목(현금주의 기반) 보고를 발간하며, 연간 또는 분기별로 발생주의 예산항목과 우발부채와 부외금융 항목을 포함한 정부 재정상태표를 발간한다.

3) 재정적 강점(Fiscal Strength): 정부의 자원 동원 능력과 비교했을 때 채무 부담 능력은?

정부 재정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점검한다. 현재 및 예상 부채를 부담하기 위해 자원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평가한다.

경제적 강점의 지표 / 스코어

- 채무 부담(GDP 대비 부채비율, 세입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경제규모(GDP 대비)와 실제 수익기반에 대한 국가채무 수준
- 부채여력(debt affordability) (GDP 대비 이자지급율, 세입 대비 이자지급율)
국가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것은 채무 수준, 지급 이자 및 정부가 창출하는 수익에 영향을 받는다.

4) 리스크 민감성(Susceptibility to Event Risk): 기초신용등급(fundamental credit profile)에 대한 직접적이고 갑작스러운 위협의 리스크는?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사건이 공공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여 국가의 채무불이행 확률을 급격히 높일 수 있는 위협을 뜻한다.

리스크 민감성 강점의 지표 / 스코어

- 정치적 리스크 (정성적 분석)
- 정부유동성 위험 (정성적 분석)
정부유동성 위험은 특히 채무상환과 관련된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정부의 자금조달 실적과 자금조달 전략의 건전성 평가에 기초한 자금조달 용이성(Ease of Access to Funding)에 대한 질적 조정을 수행하며, 이때 금융부문의 규모와 구성, 정부채권의 다양성과 유동성, 투자자의 기반, 준비통화(reserve currency) 지위 등을 고려한다. 향후 2년간 GDP 대비 정부의 자금수요 규모와 자금조달 용이성에 따른 높은 채투자 위험에 대한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 은행부문 위험(은행부문 규모, 평균 독자신용등급(BCA: Baseline Credit Assessment))
- 외부 취약성 위험(정성적 분석)

사라 칼슨(Sarah Carlson)은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문답 시간에, 각 국가의 재무정보를 활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으로 ISA(회계감사기준)의 적용 등 국제비교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공공부문통합결산서는 영국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 (발표 4: 언론-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언론의 재무정보 활용 현황과 제안사항

정보이용자의 관점 소개 두 번째로 언론의 관점이 소개되었다.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의 경제 편집자이자 “유럽인의 소리(POLITICO Europe)”에서 무역 경제특파원으로 활동 중인 안나 아이작(Anna Isaac)은 언론에서 정부가 발간하는 재무보고를 기사화하는 과정, 독자의 요구사항과 재무정보 작성자에게 전하는 제안사항을 공유했다.

(재무정보 활용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기자들에게는 정부가 공개하는 재무보고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짧은 시간이 허용된다. 더불어 대부분의 기자들은 재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부 재무보고서에서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식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독자들의 요구사항)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재정의 현 주소(좋은지, 나쁜지)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 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국제기준과 이웃 국가들이 발간하는 수준으로 정부의 재무보고서가 산출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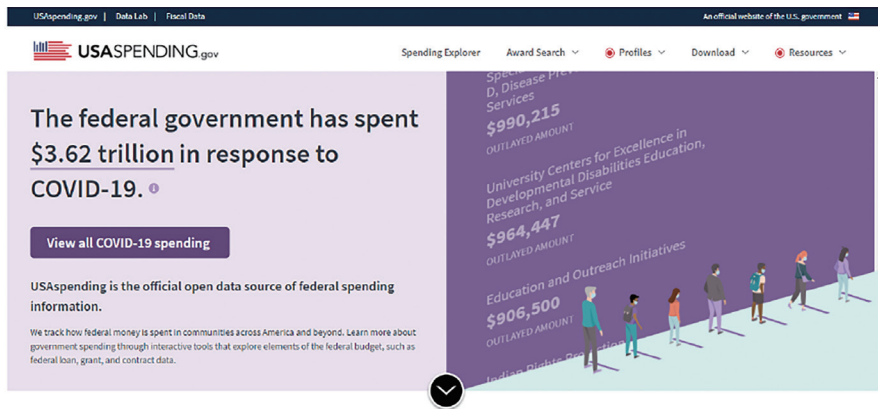
(제안사항) 정부재정 관련 보고의 모범적 예시로 영국 의회 브리핑을 들 수 있다. 해당 브리핑은 주요 정보이용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편향되지 않게 정부재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정부 지출의 영향을 제공한다. 이에, 재무부처에 전하는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요 재정 이벤트(봄예산, 가을예산에 대한 재무장관 보고) 개최 시 보고서의 범위 등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사에 브리핑 제공
- 2) 기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 작성기관이 주관하여 발간된 보고서의 탐색법에 대한 교육 제공

● (발표 5: 미국 재무부)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이터 이용자 참여

미국 재무부는 정보이용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재무데이터 시스템(USA SPENDING)⁵⁾을 구축했다. 정보이용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이용자 중심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이러한 디자인의 핵심은 정보이용자의 필요를 이해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경험(UX)을 효율적으로 간소화하며, 시각화된 데이터에 대한 쉬운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정보이용자를 시민, 기자 또는 감시인(watchdog), 데이터 제공자,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 개발자, 정부 수요자, 기업의 자금관리이사(CFO), 예산 분석가, 데이터 재생산자로 분류하여 사람 중심의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350명 이상의 참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데이터 이용자의 참여로 구축된 디지털 국가재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이 제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하루 100만명 이상의 방문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센터를 통해 연간 2천개 이상의 질의에 회신한다.

5) 미국 재무부 주관 재무정보 데이터 전용 홈페이지: USA SPENDING,* <https://www.usaspending.gov/>
* 동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서 Data Lab과 Fiscal Data에 접속할 수 있다.

02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4개국 결산보고서 소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021년도 「재무보고 개선 프로젝트」 과제의 일환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4개국⁶⁾의 최신 결산보고서를 전체 번역하여 그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4개국은 20년이 넘는 발생주의 재무보고의 경험을 토대로, 발생주의 결산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정개혁을 통해 재무보고 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각 국가들의 2020회계연도 기준 결산보고서는 세부 내역에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되며, ① 책임서한(재무부 장관 메시지 또는 회계책임보고서), ② 감사보고서, ③ 요약정보(결산요약 또는 결산개요), ④ 재무제표 ⑤ 관련 주석, ⑥ 현금주의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분량은 미국의 경우 총 256페이지, 호주 183페이지, 뉴질랜드 177페이지, 캐나다 392페이지에 해당한다. 특히 2020회계연도 기준 결산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과 정부의 대

6) 영국은 발생주의 선진국가로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의 발표가 지연되어 제외되었다.

응을 수치화하여 담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한국의 2020회계연도 기준 국가 결산 산보고서는 총 1,461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이 중 현금주의 정보의 비중이 1천페이지를 차지하며, 재무부 장관 메시지나 감사원장의 확인서 등이 포함되지 않아 해외 주요 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

센터는 주요국 결산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국가결산서의 이해가능성과 유용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표1 국가별 결산보고서 구성

	구분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① 책임서한	재무부 장관 메시지	○	○	○	×	×
	회계책임보고서	×	×	○	○	×
② 감사보고서 (감사원장)		○	○	○	○	×
③ 요약정보	결산 요약	○	○	○	○	×
	결산 개요	○	×	○	○	○
④ 재무제표		7종	4종	7종	5종	3종
⑤ 주식		29개	49개	30개	21개	8개
⑥ 현금주의 정보		×	×	×	×	○
	총분량	256p	183p	177p	392p	1,46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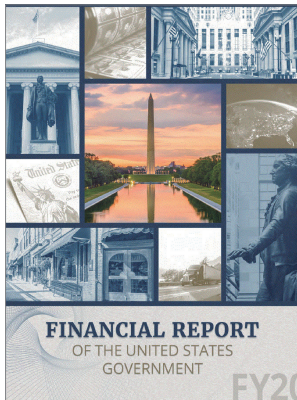
출처: 저자 직접 작성

1.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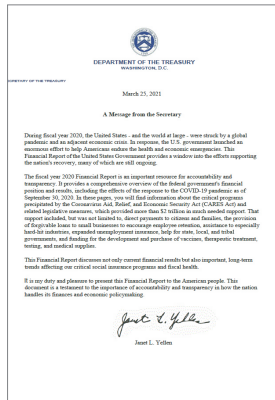
가. 결산서의 구성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는 재무부 장관 메시지, 결과요약(Result in Brief), 결산 개요(Executive Summary), 경영진단의견서(MD&A), 미국 감사원의 성명서, 재무 제표 및 재무제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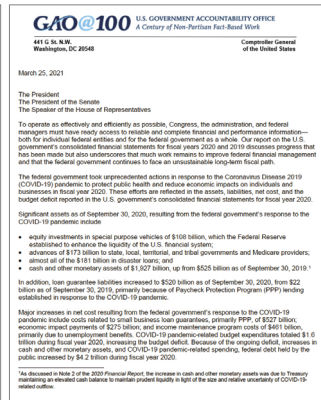
재무제표는 총 7종으로 순원가표, 운영 및 순자산변동표, 순운영원가 및 예산적자 조정표, 예산 및 기타활동으로 인한 현금변동표, 재정상태표, 장기재정전망표, 사회보험표, 사회보험금액변동표로 구성되며 관련 주석으로 총 29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필수보충정보(미감사)와 기타정보(미감사)를 추가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연방 결산보고서



재무부 장관 메시지



감사원장 성명서

7)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표(2021.3)한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0”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current-repor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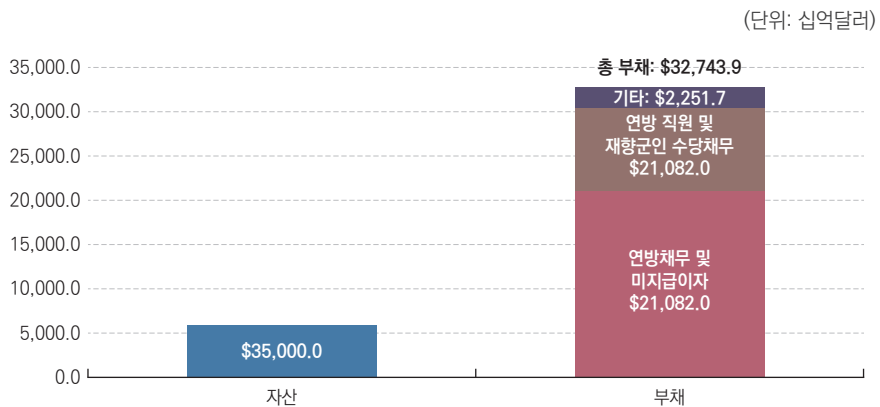
나. 결산 요약

1) 자산 및 부채

2020회계연도 현재 미국 정부의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 6조달러, 32조 7천억달러이며, 일치하지 않는 거래 및 잔액⁸⁾(30억달러)을 차감한 후의 순자산은 26조 7천억달러 적자이다. 참고로 미국의 2020년도 GDP는 약 21조달러이다.

연방정부의 자산 6조달러 중 75% 이상은 ① 현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1조 9천억달러), ② 순 대출채권(1조 6천억달러), ③ 순 일반유형자산(1조 1천억달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은 재무부가 보유한 운영현금이 2020회계연도 중에 1조 4천억달러(37.1%)가 증가하여 1조 8천억달러가 되었는데, 이는 주로 코로나 19 관련 현금유출의 규모와 불확실성이 커서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현금보유금액이 확대된 결과이다.

그림1 2020회계연도 미국 연방 자산 및 부채 현황



출처: 미국 재무부, 「미국 연방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0), 2020.

부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방채무 및 미지급이자⁸⁾는 정부 적자해결을 위한 차입으로 발생하며, 전년 대비 4조 2천억달러(25%)가 증가하여 21조 1천억달러였다. 또 다른 주요 항목은 연방 종업원 및 재향군인 미지급연금급여(즉, 군인과 공무원에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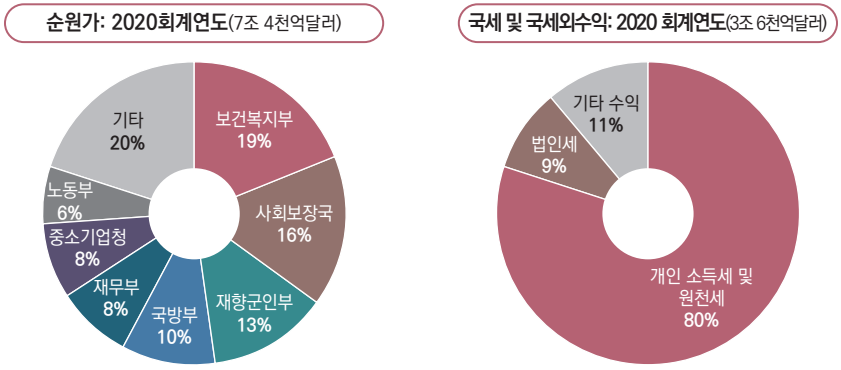
8) 일치하지 않는 거래 및 잔액(unmatched transactions & balances)은 주로 조정되지 않은 정부 간 차이로 인해 발생된 순자산 변동의 균형을 맞출 때 이용되는 조정사항이다.

한 정부 연금 및 기타 복지제도)이며, 2020회계연도 중에 9,690억달러(11.5%)가 증가한 약 9조 4천억달러였다. 총 금액은 재직 및 퇴직 공무원을 위한 미지급연금급여(benefits payable) 2조 7천억달러와 군인 및 재향군인을 위한 6조 7천억달러로 구성된다.

2) 수익 및 비용

미국 정부는 순원가로부터 국세 및 국세외수익을 차감 및 일부 조정을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최종결과인 ‘순운영원가(Net operating cost)⁹⁾’를 산출한다. 2020회계연도의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2조 4천억달러(164.7%) 증가한 3조 8천억달러 적자였다. 적자의 원인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고실체의 순원가가 2조 3천억달러(46.3%)로 크게 증가하고 국세 및 국세외수익이 494억달러(1.4%)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2 2020회계연도 미국 순원가 및 국세 및 국세외수익



출처: 미국 재무부, 「미국 연방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0)」, 2020.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는 예산보고서와 재무보고서의 결과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2020회계연도 예산적자(budget deficit)는 전년 대비 2조 1천억달러가 증가한 3조 1천억달러이다. 예산적자와 순운영원가 간의 차이인 6,969억달러는 주로 순운영원가에는 포함되나 재정적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연방 종업원 및 재향군인 관련 미지급비용(발생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비용), 코로나19 대응 선급금, 국세채권 등에서 발생한다.

9) 순운영원가 = 순원가 - 국세 및 국세외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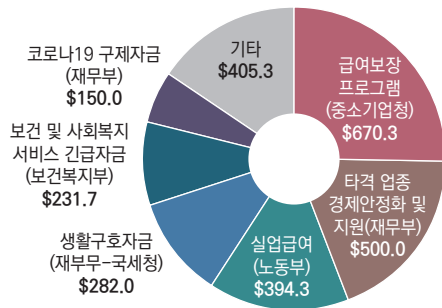
다. 코로나19 대응

미국 정부는 2020회계연도 중에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공법 제116-136호 및 CARES Act를 포함하는 4개의 주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들은 미국 근로자와 가족, 중소기업 그리고 주정부, 지방정부, 원주민 부족정부를 지원하고 산업계 일자리를 보존함으로써 코로나19가 국민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승인되었다. 2020회계연도 동안 취해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며, 다양한 방식과 정도로 여러 정부 실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제법률 책정금액

(단위: 십억달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제법률에 책정된 금액 2020년 9월 30일 현재 총 2조 6천억달러



출처: 미국 재무부, 「미국 연방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0)」, 2020.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법을 통해 연방실체가 2020회계연도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2조 6,336억달러를 추가 책정하였다. 그중 재무부가 9,750억달러를 책정받아 5천억달러를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적격 기업, 주정부, 지방정부에 투자 및 대출 보조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 재무부는 뉴욕연방준비은행(FRBNY) 및 보스턴연방준비은행(FRBB)을 통해 설립된 특수목적기업(SPV)에 1,079억달러 규모의 지분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순손실 45억달러가 재무부 순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 202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는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각 실체별 책정금액 및 운용 현황을 ‘주석 28 - 코로나19 활동(COVID-19 Activity)’이라는 별도의 챕터로 구성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 호주 영연방 재무보고서¹⁰⁾

가. 결산서의 구성

「연결재무제표」는 재무부 장관 메시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요약(Commentary o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및 부문별 재무제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총 4종으로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를 제공하며 관련 주석으로 총 49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결산보고서 표지

재무부 장관 메시지

감사원장 성명서

10) 호주 영연방에서 발표(2020.9)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0」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current-report.html>
<https://www.finance.gov.au/publications/commonwealth-consolidated-financial-statements>

나. 결산 요약

1) 자산 및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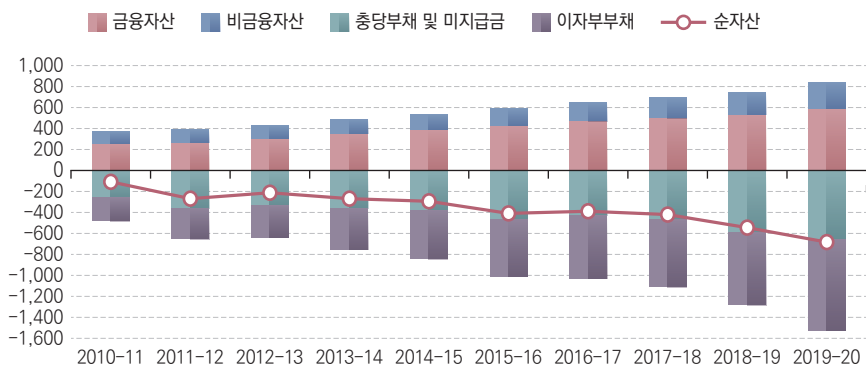
2020년 6월 30일 현재 호주 정부의 총자산은 8,386억호주달러이며, 총부채는 1조 5,185억호주달러이다. 2020년 호주정부의 순자산은 1,347억호주달러가 감소하여 2020년 6월 30일 현재 6,799억호주달러의 마이너스 순자산으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호주의 2020년도 GDP는 약 1조 3천억달러이다.

호주정부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1,013억호주달러(13.7%)가 증가하였다. 이 중 자산의 가장 큰 주요 변동사항은 전체 자산의 47.0%를 차지하고 있는 출자금, 대여금 및 투자금의 증감에 따른 것이다. 출자금, 대여금 및 투자금은 전년 대비 608억호주달러가 증가하였고, 이는 준비은행의 국채 보유고 증가, 즉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준비은행이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유통시장에서 매입하여 보유하는 국채의 증가가 주된 요인(572억호주달러)이다.

총부채의 경우도 전년 대비 2,360억호주달러(18.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국채 발행(1,066억호주달러 증가)과 코로나19 팬데믹 경제대응계획의 일환으로 기업 지원 일자리유지 보조금 및 임시 현금흐름 지원정책 시행 결과에 따른 총당부채(196억호주달러 증가)가 증가 요인에 해당한다.

그림4 호주 재정상태의 변화: 2010~2011년 이후 재정상태표

(단위: 십억호주달러)



출처: 호주 재무부,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0)」, 2020.

2)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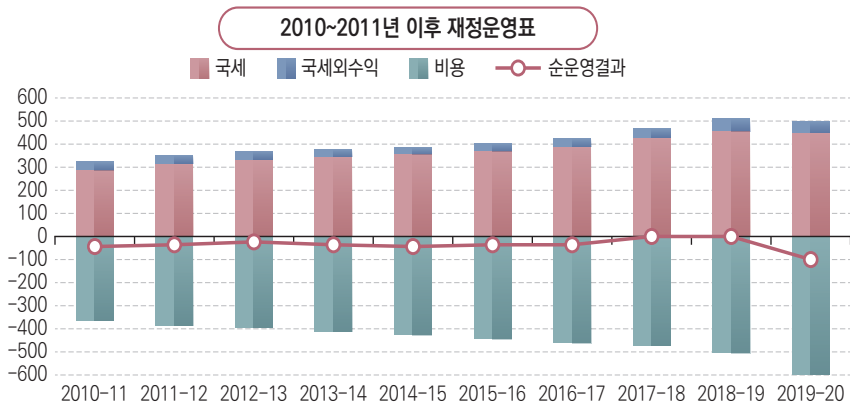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2020회계연도 현재 순운영결과(Net operating balance)는 997억호주달러 적자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운영결과가 1,029억호주달러 악화되었다. 순운영결과 변동의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유의적인 영향, 그리고 호주 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경제대응계획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호주 정부의 경제활동을 현격하게 위축시켰으며 그 결과 국세는 줄어들고 실업급여지출은 늘어났다.

2020년 6월 30일 마감 회계연도의 호주정부 총 국세수익은 4,471억호주달러로 집계되었다. 국세수익은 전년 대비 88억호주달러(1.9%)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법인세 69억호주달러, 퇴직연금기금세 43억호주달러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이다. 그중 일부는 관세 36억호주달러(특히 담배세)에 의해 상쇄되었다.

호주정부의 총비용은 6천억호주달러이며 전년 대비 954억호주달러(18.9%)가 증가하였다. 비용도 수익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경제대응책으로 인한 보조금 비용이 주된 증가 사유로 분석되었다.

그림5 호주 재정운영 현황의 변화: 2010~2011년 이후 재정운영표

(단위: 십억호주달러)



출처: 호주 재무부,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0)」, 2020.

다. 코로나19 대응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가계와 기업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도록 경제지원정책을 펼쳤다. 그중 팬데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Coronavirus Supplement)을 지급하고 연금 수급자와 적격 수령자에게 경제지원금(Economic Support Payment) 1차분 750억 호주달러를 지급한 사례가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유지 보조금(JobKeeper Payment)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임시 현금흐름 지원대책을 시행하여 적격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지원하였다.

호주 정부는 「연결재무제표」에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별도의 주석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결산보고서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3. 뉴질랜드 정부 재무보고서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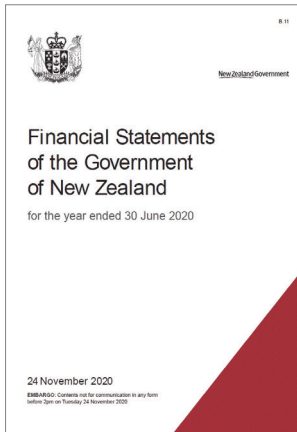
가. 결산서의 구성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는 재무부 장관 메시지, 회계책임보고서(Statement of Responsibility),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감사관 등의 독립감사보고서, 뉴질랜드 정부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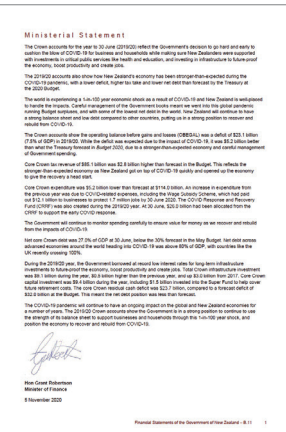
재무제표는 총 7종으로 재무성과표, 기능별 비용분석,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재정상태표, 부문별 명세서를 제공하며 관련 주석으로 총 30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보충 설명(미감사)과 추가재무정보(미감사)를 결산보고서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11) 뉴질랜드 정부에서 발표(2020.11)한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0」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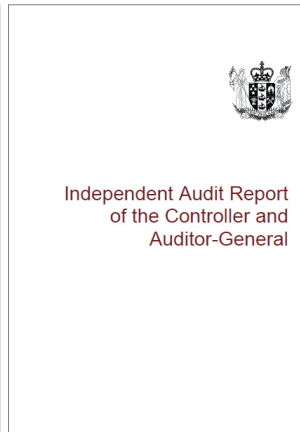
<https://www.treasury.govt.nz/publications/year-end/financial-statements-2020>



결산보고서 표지



재무부 장관 메시지



독립된 감사보고서

나. 결산 요약

1) 자산 및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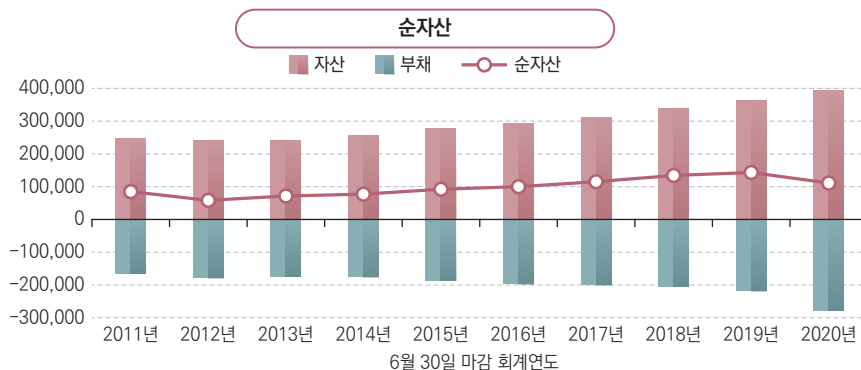
2020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정부 총자산은 3,934억뉴질랜드달러이며, 총부채는 2,775억뉴질랜드달러이다. 뉴질랜드 정부의 순자산은 1,159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274억뉴질랜드달러 감소하였다. 부채 증가가 자산 증가를 추월하여 순자산 또한 감소하였다.

자산은 전년 대비 287억뉴질랜드달러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보유 금융자산 증가에 기인한다. 금융자산의 경우 2020회계연도 기준 1,833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192억뉴질랜드달러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의 주요 구성요소는 준비은행이 보유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 91억뉴질랜드달러가 증가한 탓이다. 이는 주로 준비은행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자금조달위험 관리 및 유동성위험 관리 목적의 충분한 유동성 버퍼(liquid buffer)를 공급하기 위해 재정상태표를 관리하고 공개시장조작을 시행한 결과다.

부채의 증가는 차입금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62억뉴질랜드 달러가 증가한 2,775억뉴질랜드달러로 집계되었다. 이 중 차입금은 2020회계연도 기준 1,527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425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고, 이는 준비은행 결제예금이 LSAP 프로그램¹²⁾(161억뉴질랜드달러 증가)과 단기국채(78억뉴질랜드달러의 증가)의 증가 등 복합적 용인이 적용된 결과이다.

그림6 2011~2020년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단위: 백만뉴질랜드달러)



출처: 뉴질랜드 정부,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0.)」,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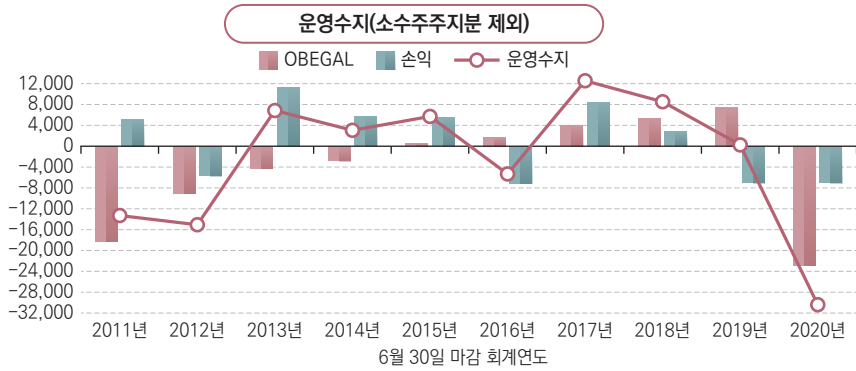
2) 수익 및 비용

2019/20회계연도의 차손익반영전운영수지(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 and Losses, 이하 'OBEGAL')는 231억뉴질랜드달러 적자로 이는 전년도에 흑자로 인식한 금액에 비해 305억뉴질랜드달러가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정부의 경제회복 대응 조치에 기인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중앙정부세수는 14억뉴질랜드달러가 감소하였고, 그 밖에도 정부 재정대응의 결과 중앙정부비용이 전년 대비 218억뉴질랜드달러가 증가하였다. 세수 감소와 비용 증가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흑자 감소와 결합하여 OBEGAL 적자를 초래하였다.

12) LSAP(대규모자산매입)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준비은행이 유통시장에서 국채 환매를 통해 차입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그림7 2011~2020년 운영수지

(단위: 백만뉴질랜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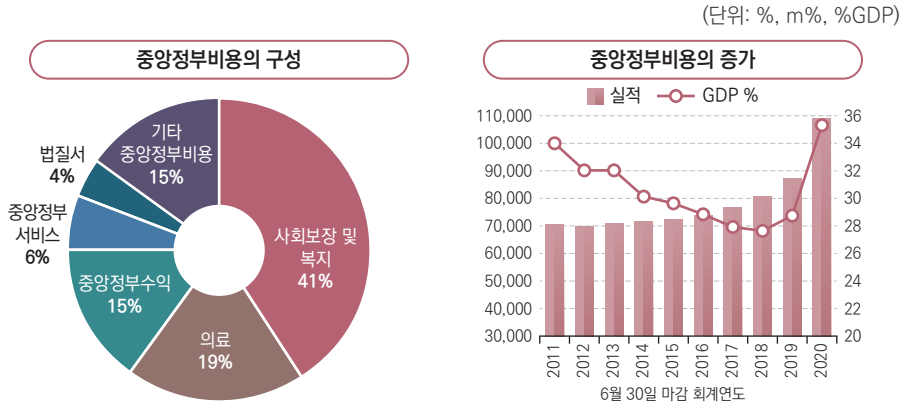
출처: 뉴질랜드 정부,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0)」, 2020.

2020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정부총수익은 1,160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31억뉴질랜드달러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앙정부세수 감소와 공기업(SOE)의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감소에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세수는 851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14억뉴질랜드달러(1.6%) 감소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세수의 감소는 대체로 현 경제 여건상 민간소비 감소, 기업투자 축소 및 실물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결과이다.

2020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당기 정부총비용은 전년 대비 275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한 1,389억뉴질랜드달러로 집계되었다. 증가분은 주로 중앙정부 부문에서 발생하였고(218억뉴질랜드달러) 나머지 57억뉴질랜드달러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생하였다(내부거래 제거 포함). 이러한 지출의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피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시행된 임금보조금제도가 최대 증가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그림8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총비용 변화



출처: 뉴질랜드 정부,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0)」, 2020.

다. 코로나19 대응

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 예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복구를 위해 620억뉴질랜드달러의 기금을 5년에 걸쳐 집행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그 구성은 1차 재난 지원금 120억뉴질랜드달러(2020년 3월 17일 공표),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기금(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Fund, CRRF) 500억뉴질랜드달러다. 이러한 2019/20회계연도에 재정지원 조치가 재정에 미친 영향을 뉴질랜드 정부는 주로 운영비용을 통해 보고하며, 정부의 재정지원 조치는 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 완화, 일자리 보호 및 뉴질랜드의 공중보건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2 정부의 재정지원 조치(재정정책)

(단위: 백만뉴질랜드달러)

재정지원 조치 원과	실제			배정 2020
	운영 2020	자본 2020	합계 2020	
임금 보조금 제도	12,095	-	12,095	15,200
중소기업 현금유동성 대출제도(SBCS)	686	1,423	2,109	5,200
세금손실 소급공제	83	-	83	1,200
고등교육 보고기금	1,098	-	1,098	1,186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	20	-	20	546

출처: 뉴질랜드 정부,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0)」,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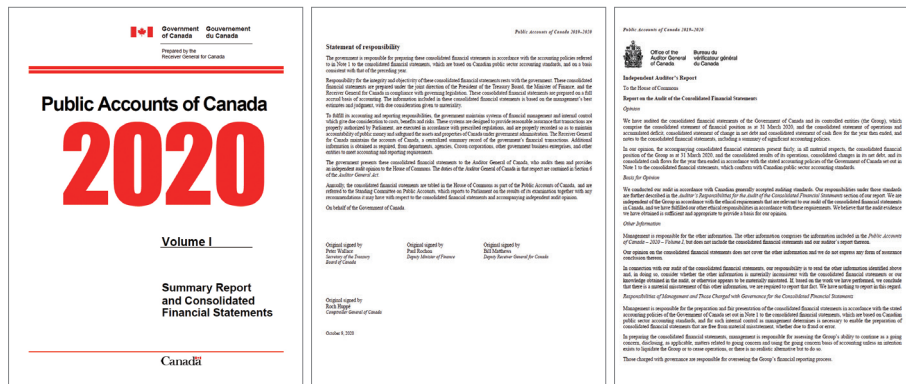
뉴질랜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는 뉴질랜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재정지원 조치 원가에 대한 정보를 ‘주석 3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이라는 별도의 챕터로 구성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4. 캐나다 정부 재무보고서¹³⁾

가. 결산서의 구성

캐나다는 「재무결산서」 Volume 1 중 섹션 1 ‘재무제표 논의와 분석’에서 재무결산에 관한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섹션 2 ‘캐나다 정부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회계책임보고서, 감사원의 독립된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와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총 5종으로 연결운영성과 및 누적적자표, 연결재정상태표, 연결순채무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세입·세출외거래 및 비금융자산의 연결재무제표를 제공하며, 주석은 총 21종을 제공하고 있다.



결산보고서 표지

회계책임보고서

독립된 감사보고서

13)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2020.11)한 「Public Accounts of Canada 2020, Volume 1」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psgc-pwgsc.gc.ca/recgen/cpc-pac/index-eng.html>

나. 결산 요약

1) 자산 및 부채

2020년 3월 31일 마감 캐나다 정부의 총부채는 1조 2,486억캐나다달러이며, 총자산은 5,272억캐나다달러로, 이 중 금융자산은 4,357억캐나다달러, 비금융자산은 915억캐나다달러이다. 캐나다 정부는 총자산과 총부채의 차액을 “누적적자(순자산)”로 표시한다. 2020회계연도 누적적자는 7,214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359억 캐나다달러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재정적자 394억캐나다달러에서 기타포괄손익 35억 캐나다달러를 상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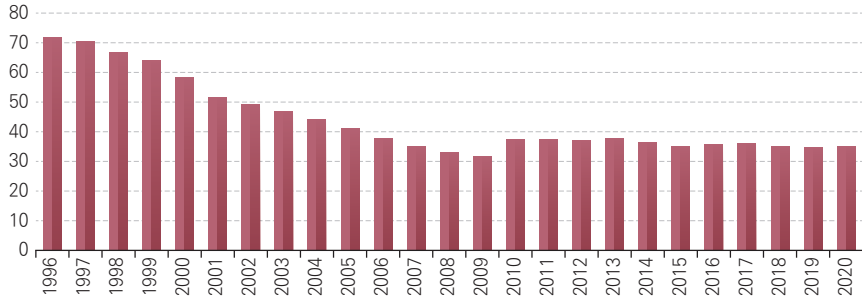
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226억캐나다달러가 증가하였고 비금융자산은 49억캐나다달러가 증가하였다. 자산 증가의 대부분은 대여금, 출자금 및 선급금에 해당하며 2020년 현재 1,525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186억캐나다달러가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캐나다사업개발은행 주관 기업신용지원프로그램의 코로나19 유동성 지원 구제금융 조치와 캐나다농업신용기금의 대출 여력 확대를 위한 지원 조치에 따른 것이다.

부채는 전년 대비 634억캐나다달러가 증가하였으며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는 이자부채무인 만기미도래채무에서 발생하였다. 만기미도래채무는 2020년 현재 7,838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468억캐나다달러가 증가하였다. 만기미도래채무는 고정금리부 시장성 있는 채권, 물가연동채권, 단기국채, 소매채무(캐나다저축채권과 캐나다프리미엄채권), 외화표시부채, 금융리스 관련 채무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채무로 구성되며 2020년 3월 31일 현재 총 이자부채무의 72.3%를 차지하였다.

누적적자는 2020년 3월 31일 현재 GDP의 313%에 해당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누적적자가 정점에 달했던 것은 1996년으로 66.6%였다.

그림9 1996~2020년 누적적자, GDP에서 자치하는 비율

(단위: %)



출처: 캐나다 재정부, 「재무결산서(Public Accounts of Canada 2020)」, Volume 1, 2020.

2)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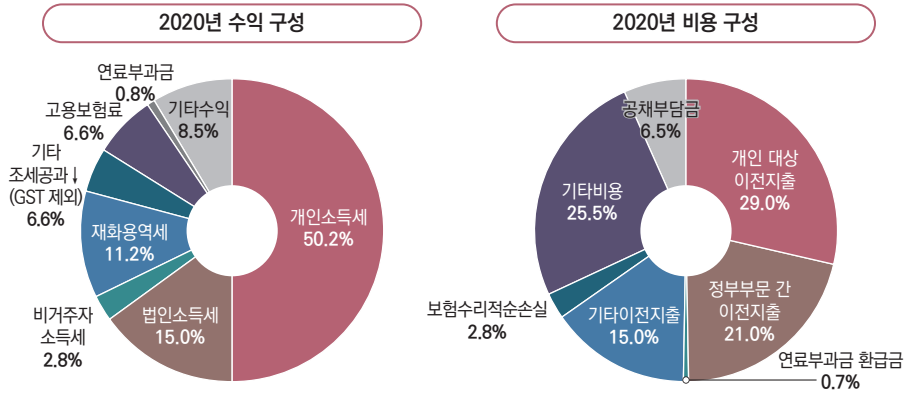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31일 마감 회계연도에 394억캐나다달러의 예산적자를 보고하였다. 보험수리적순손실전 예산적자(budgetary deficit before net actuarial loss)는 288억캐나다달러이다. 보험수리적순손실전 재정수지란, 정부의 연금 및 기타 종업원 미래급여제도에서 비롯된 보험수리적순손실 상각의 영향을 분리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재정수지를 보완하고 재정수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척도를 말한다.

2020년 총수익은 3,341억캐나다달러로 2019년 대비 19억캐나다달러(0.6%)가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소득세수익의 증가와 연료부담금수입금제의 도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19년 4월에 발효된 연방 탄소가격제에 따른 연료부담금은 2020년 연방정부 총수익의 0.8%를 차지할 뿐이며 총수익의 증가는 소득세수익이 주된 요인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가 50.2%, 법인소득세가 15.0%로 수익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총비용은 3,735억캐나다달러로 2019년 대비 273억캐나다달러(7.9%) 증가하였다. 보험수리적순손실을 제외한 정부사업 비용은 주로 이전지출의 증가로 말미암아 239억캐나다달러(7.6%)가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한다. 그 외에 보험수리적순손실은 전년 대비 22억캐나다달러(26.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금 및 기타 종업원 미래급여 채무의 가치 평가에 사용된 연말 이자율의 하락, 그리고 장애급여와 기타 미래급여의 활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채무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림10 수익과 비용

(단위: %)



출처: 캐나다 재정부, 「재무결산서 Public Accounts of Canada 2020, Volume 1」, 2020.

*개인 대상 이전지출: 노인지원, 고용보험, 아동지원

*정부부문 간 이전지출: 보건 및 사회보장프로그램 지출, 재정형평화보조금 등

다. 코로나19 대응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대응계획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대응계획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로자와 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요구를 충족하고 경제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 및 관세 납부 유예조치를 시행하였다.

코로나19 경제대응계획이 정부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 중 2020회계연도 예산 집행결과에 반영된 것은 비교적 일부로 대부분은 2021회계연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2020회계연도에는 주와 준주 공중보건위기 대비 및 핵심 보건의료체계를 지원하는 긴급대응지원금(CERB) 65억캐나다달러와 국가 공중보건 팬데믹 재난기금 2억 캐나다달러가 반영되어 있다. 캐나다 정부는 ‘주석 21 - 후속사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2022년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01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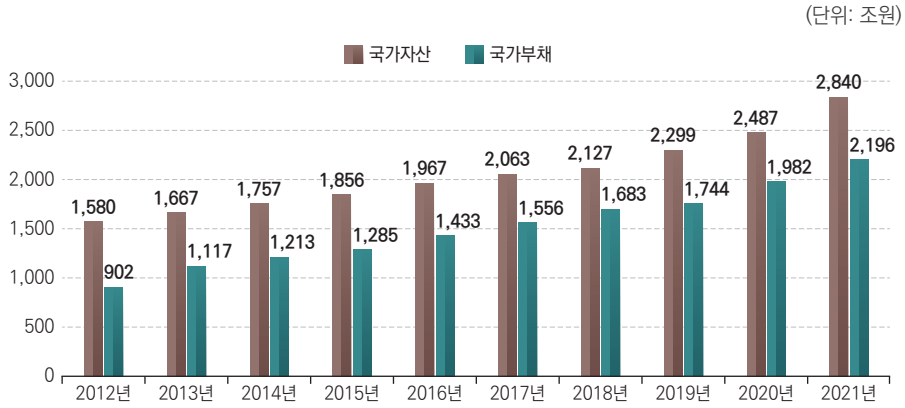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2022년 4월 5일 발표하였다. 국가결산 결과 2021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기금·여유자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52.8조원 증가한 2,839.9조원, 부채는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14.7조원 증가한 2,196.4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43.5조원이다.

2021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839.9조원으로 전년 대비 352.8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자산 152.6조원, 일반유형자산 101.5조원, 유동자산 62.0조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 말 현재 자산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41.1%와 24.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19.9%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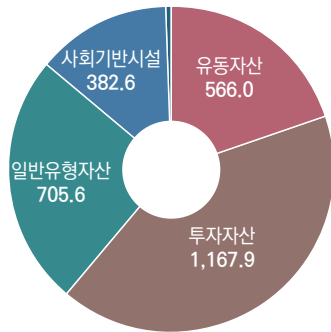


그림1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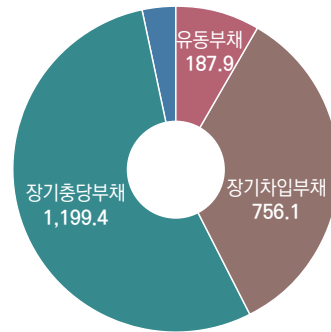
출처: 2012~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그림2 국가자산의 구성



출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그림3 국가부채의 구성



출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1년 말 현재 자산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327.5조원, 현금및현금성자산 59.0조원, 단기금융상품 64.6조원 등 총 566.0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809.8조원, 장기대여금 178.3조원 등 총 1,167.9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467.6조원, 건물 67.6조원 등 총 705.6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177.5조원, 철도 54.5조원 등 총 382.6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2.3조원 등 총 2.5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미수채권 7.8조원 등 총 15.3조원이다.

2021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2,196.4조원으로 전년 대비 214.7조원 증가하였다. 주요 요인은 장기차입부채 97.6조원, 장기충당부채 96.8조원, 유동부채 20.0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4.6%, 장기차입부채는 34.4%, 유동부채는 8.6%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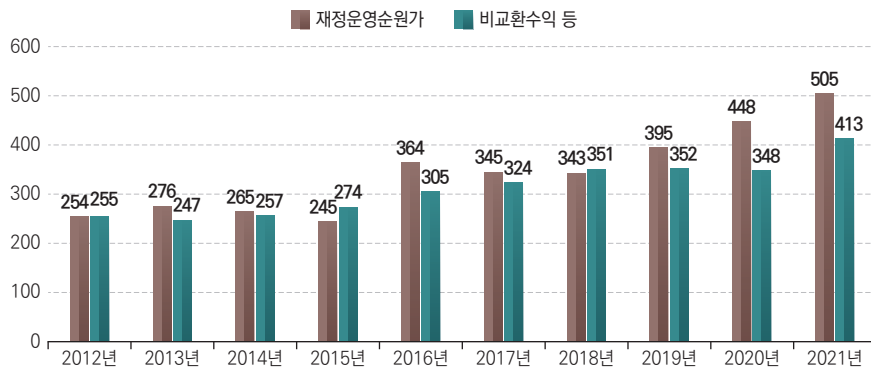
2021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96.3조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63.3조원 등 총 187.9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737.6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5.6조원 등 총 756.1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1,199.4조원은 연금충당부채 1,138.2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52.1조원, 기타 9.1조원(보증충당부채 5.5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53.0조원은 장기미지급자료를 포함한 기타비유동부채 40.4조원, 장기미지급금 12.6조원이다.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5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56.9조원이 증가하였다.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의 비교환수익 등은 413.2조원,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91.8조원이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림4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조원)



출처: 2012~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02 2022년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국가회계교육 사업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가회계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회계 업무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8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과 전문적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의 전문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집합교육인 국가회계 전문교육, 국가회계의 활용,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사이버 강좌 제공 등 수강생 중심의 교육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국가회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무원의 회계업무역량 강화 및 국가회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2022년 국가회계교육’ 사업에서 추진하는 6대 중점 실행 과제와 2022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일정에 대해 소개한다.

가. 교육 목표

국가회계교육은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국가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업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6가지 중점 실행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교육생 니즈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표1 2022년도 국가회계교육 중점 실행 과제

비전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운영	
미션	국가회계 전문기관으로서 센터의 전문성 발휘를 통해 공무원 회계 업무역량 강화 및 국가회계 활용 가능성 제고	
2022 년도 중점 실행 과제	1	국가회계교육 외부강사 풀 확대 신규 강사 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재 및 강의 질 제고
	2	연구원 자체 비대면 온라인 교육 스튜디오 구축 운영 자체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으로 더욱 고품질의 비대면 교육 서비스 제공
	3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실무 온라인 과정 업데이트 나래배움터 온라인 교육 업데이트를 통하여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수강 지원
	4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병행 운영 고려 교육생 니즈와 코로나19 상황을 참조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과정 믹싱 운영
	5	수강생 편이를 위한 교육 신청 시스템 개선 별도 제출하던 교육 동의서를 교육 신청 시스템에 추가하여 신청자 편의 증대
	6	지속적인 온라인 교육 영상 및 교육자료 등재 국가회계교육포털 내 회계 관련 동영상 및 학습자료 등재 지속

나. 중점 추진 과제

1) 국가회계교육 외부강사 풀 확대

2018년에는 총 4명이었던 국가회계교육 외부강사를 2022년에는 총 7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강사 풀은 단순히 인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 매 과정별 강사 평가를 반영하여 교육생들이 선호하는 강사를 위주로 선발하고 교재개발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운영하여 매번 같은 교육이 아닌 새로운 강의방식과 내용으로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연구원 자체 비대면 온라인 교육 스튜디오 구축 운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에는 모든 교육 과정을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에 비교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연구원 내 자체적으로 별도의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고품질 캠코더와 마이크, 조명 등을 비롯한 각종 방송용 장비들을 구입 및 세팅하여 더욱 고품질의 비대면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3)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실무 온라인 과정 업데이트

국가공무원들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제작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실무 온라인 교육’ 과정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존 과정도 해마다 변경되는 국가회계의 개정들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든 차시를 업데이트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수강이 가능했던 본 과정을 2023년부터는 크롬을 비롯한 다양한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수강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해당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4)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병행 운영 고려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이 지속되자 집합교육을 원하는 교육생들의 요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교육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정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을 지속 운영하기를 바라는 교육생들의 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보아 집합교육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미정이나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더라도 일부 과정들은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하여 교육장소가 너무 멀거나 교육일정이 맞지 않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육생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5) 수강생 편이를 위한 교육 신청 시스템 개선

비대면 교육 신청 시, 별도로 교육생들에게 받은 재택학습 동의서가 교육 수강 신청 시스템에 추가되어 앞으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해당 재택학습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교육생들은 더욱 편하게 국가회계교육포털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적 처리도 줄어들어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6) 지속적인 온라인 교육 영상 및 교육자료 등재

현재 국가회계교육포털에는 국가회계 전문교육 교재 외, 국가회계이론 기초, 국가회계실무 업무유형별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 재무결산 중간점검 온라인 설명회 등의 동영상 등이 등재되어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필요하지만 여러 여건상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위 교육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가회계교육포털 내에 국가회계교육뿐만 아니라 회계 관련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활용 바란다.

다. 2022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2022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3차에 걸쳐 실시 예정이다. 본 교육은 국가회계에 관심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가회계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2019년도까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하였으나,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체 교육 과정이 진행되었다. 올해는 교육신청접수 전까지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방역지침을 참조하여 교육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교육과정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으로 구성된다.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2일간 진행되며, 1일차에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기초 원리와 이해, 재무제표 만들기 실습, 국가회계제도의 이해로 구성된다. 2일차에는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는 국가회계의 기초적인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국가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주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회계의 업무유형별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와 실습, 국가재무제표를 통한 국가재정상태의 이해 등 좀 더 실무적인 과정으로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

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수입·지출 과정과 국유·물품 과정이 구분하여 실시함에 따라 교육생이 담당업무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두 개 과정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중앙부처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10월과 11월에 총 2회(회당 2일) 실시된다. 본 과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국가 재무결산의 이해,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내부거래실무, 결산조정분개와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본격적인 결산에 앞서 미리 상세히 학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설된 1일차 교육 과정으로 국가자산과 부채의 특성 및 이해, 프로그램세입과 프로그램 원가 등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국가회계의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해가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회계이론 과정을 먼저 수강하고 듣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처에 직접 센터의 강사들이 찾아가 교육하는 「찾아가는 국가회계 교육」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개설되지 않는 시점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국가회계이론기초, 국가회계실무 동영상 교육들도 국가회계교육포털에서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열려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회계교육포털(<https://www.kipf.re.kr/edu/>)을 방문해 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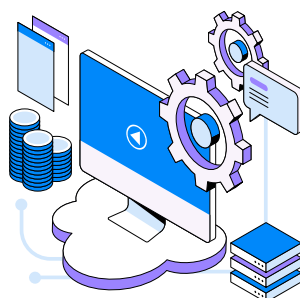


표2 2022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일정

차수	지역	교육과정	일정(예정)	기간	비고
1차	전국 (집합교육 운영 시) · 무관 (비대면교육 운영 시)	이론	6. 22.(수) ~ 6. 23.(목)	2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참조 하여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교육 진행 예정
		실무	6. 24.(금)	1일	
2차		이론	6. 29.(수) ~ 6. 30.(목)	2일	
		실무	7. 1.(금)	1일	
3차		이론	7. 6.(수) ~ 7. 7.(목)	2일	
		실무(국유·물품)	7. 8.(금)	1일	
4차		이론	7. 20.(수) ~ 7. 21.(목)	2일	
		실무	7. 22.(금)	1일	
5차		이론	7. 27.(수) ~ 7. 28.(목)	2일	
		실무	7. 29.(금)	1일	
6차		이론	8. 3.(수) ~ 8. 4.(목)	2일	
		실무	8. 5.(금)	1일	
7차		이론	8. 24.(수) ~ 8. 25.(목)	2일	
	실무	8. 26.(금)	1일		
8차	이론	9. 21.(수) ~ 9. 22.(목)	2일		
	실무	9. 23.(금)	1일		
9차	이론	9. 28.(수) ~ 9. 29.(목)	2일		
	실무(국유·물품)	9. 30.(금)	1일		
10차	이론	10. 5.(수) ~ 10. 6.(목)	2일		
	실무	10. 7.(금)	1일		
11차	국가회계의 활용	10. 13.(수)	1일		
12차	재무결산실무	10. 27.(목) ~ 10. 28.(금)	2일		
13차	재무결산실무	11. 10.(목) ~ 11. 11.(금)	2일		

※ 본 교육은 내부사정에 따라 장소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재정통계 동향



-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 2022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정현황 및 결산 일정

01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IMF의 국제통계작성기준(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이하, PSDS)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1년 12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기반으로 2020년도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부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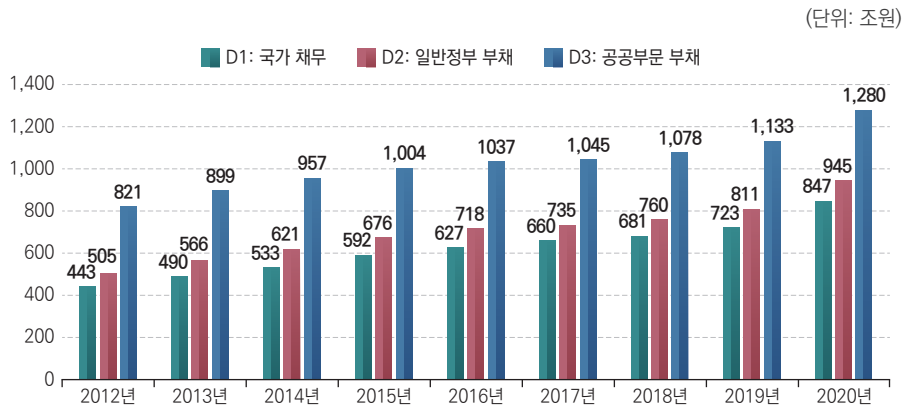
2020년의 정부의 포괄범위에 따른 부채(총부채¹⁾)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음

유형	2020년 규모 (GDP 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관리기준
국가채무 (D1)	847조원 (43.8%)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일반정부 부채 (D2)	945조원 (48.9%)	D1+비영리공공기관 (예보, 농어촌공사 등)	PSDS 발생주의	국제 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280조원 (66.2%)	D2+비금융공기업 (LH, 한전 등)	PSDS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1) 총부채(Gross Debt Liabilities)란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채무상품(Debt Instruments)은 채무자가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채권,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

우리나라의 부채 종류별 총부채 금액의 9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D2는 2012년 505조원에서 2020년 945조원으로 증가(연평균 55조원, 8.2%↑)하였고, D3는 821조원에서 1,280조원으로 증가함(연평균 57조원, 5.7%↑). 특히,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확대 등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지속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함

그림1 부채 종류별 총부채의 9개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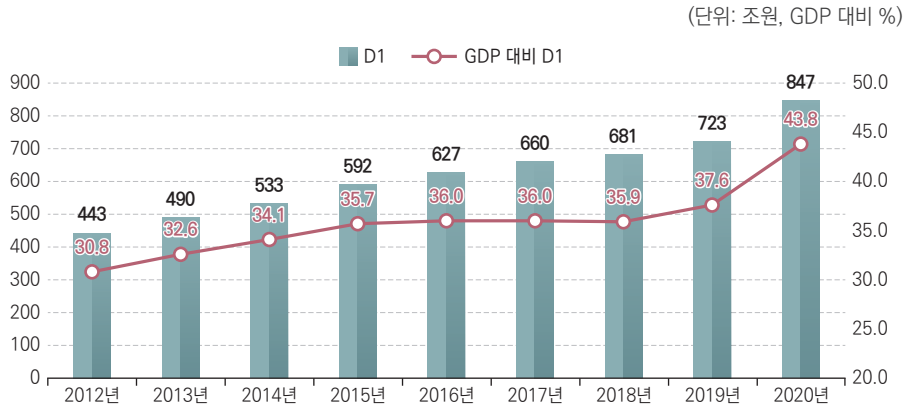
나. D1 분석

2020년의 D1은 847조원(GDP 대비 43.8%)으로 전년 대비 123조원(6.2%p)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103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8조원)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115조원)에 주로 기인함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D1의 증가속도*가 2020년 크게 증가

* 2013년 47조원(1.9%p) 증가, 2014년 43조원(1.5%p) 증가, 2015년 58조원(1.6%p) 증가, 2016년 35조원(0.3%p) 증가, 2017년 33조원(△0.1%p) 증가, 2018년 20조원(△0.1%p) 증가, 2019년 43조원(1.7%p) 증가, 2020년 123조원(6.2%p) 증가

그림2 D1의 현황 및 추세 분석



다. D2 분석

1) 증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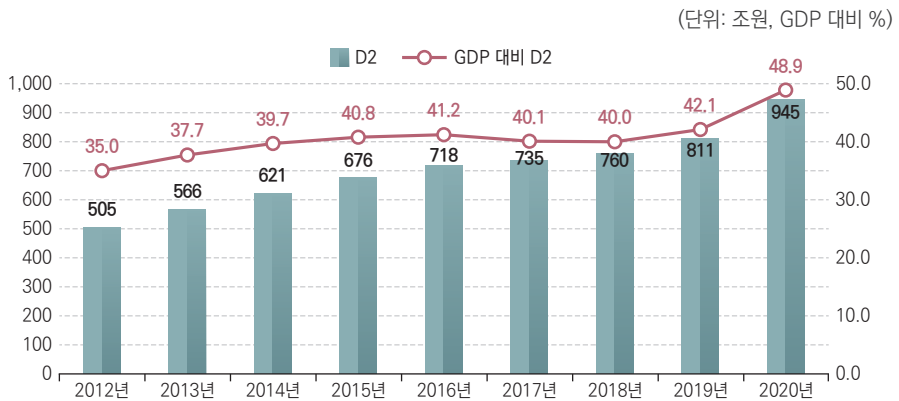
2020년의 D2는 945조원(GDP 대비 48.9%)으로 전년 대비 134조원(6.8%p)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113조원) 등에 주로 기인함

중앙정부 부채(898조원)는 전년(768조원) 대비 131조원 증가함. 일반회계 적자보전·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및 공채 등 채무증권이 111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차입금이 11조원 증가하였음

지방정부 부채(63조원)는 전년(55조원) 대비 8조원 증가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증가(9조원)하였고, 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감소로 인해 1조원 감소함

중앙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전년(50조원) 대비 4조원 증가(54조원)하였는데,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휴면예금 예수부채 증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제부금적립금 증가 등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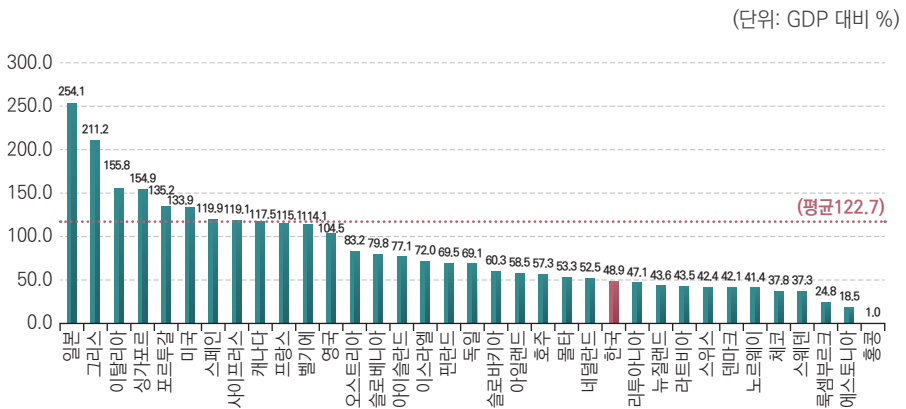
그림3 D2의 현황 및 추세 분석



2) 국제동향

D2는 국가 간 비교 시 주로 사용하는 지표이며,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부채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그림4 일반정부 총부채(D2)의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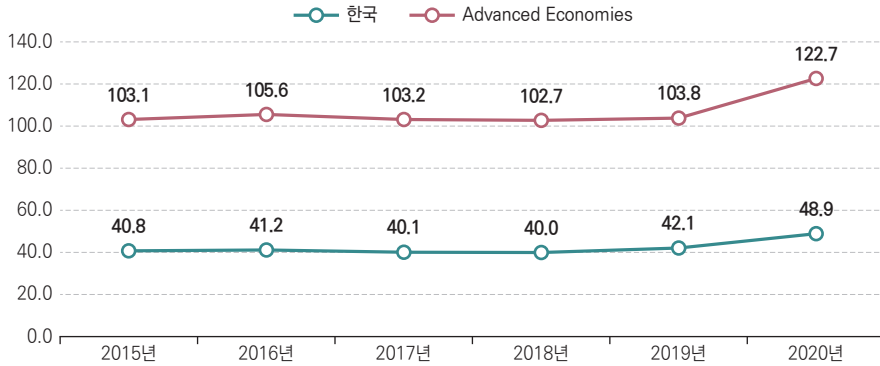


출처: IMF Fiscal Monitor(2021.10),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GDP 대비 총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우리나라 GDP 대비 총부채는 2015년 40.8%에서 2020년 48.9%로 8.1%p 증가하였고, 선진국(Advanced Economies) 평균은 2015년 103.1%에서 2020년 122.7%로 19.6%p 증가함

그림5 일반정부 GDP 대비 총부채(D2)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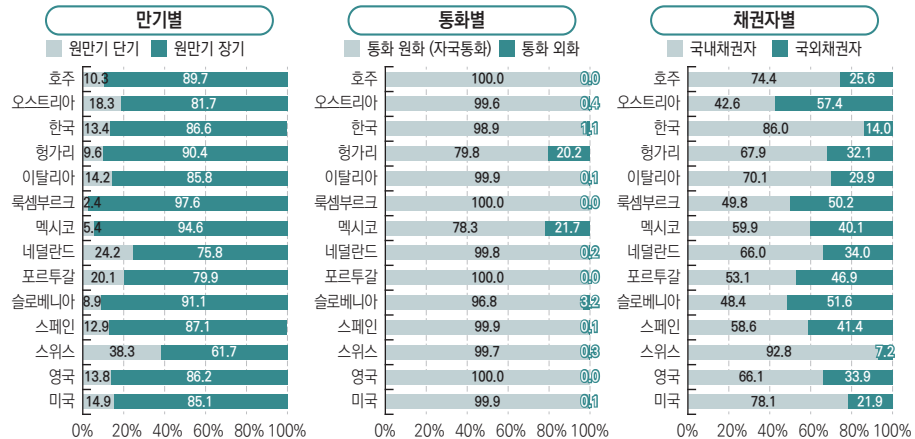


출처: IMF Fiscal Monitor(2021.10),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한편, 부채유형에 대한 추가분석을 위해 OECD 국가의 D2를 만기별, 통화별, 채권자별 거주지별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6 일반정부부문 부채별(D2)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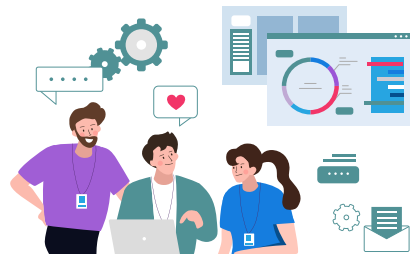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만기별) 대부분 장기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장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97.6%임. 단기부채가 많으면,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므로 만기 도래 부채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함

(통화별) 대부분 원화(자국통화) 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외화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21.7%의 비중을 보임. 외화 부채가 많으면, 환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등 환위험 관리가 필요함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채권자가 보유하는 부채 비중이 더 높은 편이며, 국내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92.8%이며, 국외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7.4%임. 국외채권자 보유 부채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IMF, OECD 등 국가별 재정분석보고서에서도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로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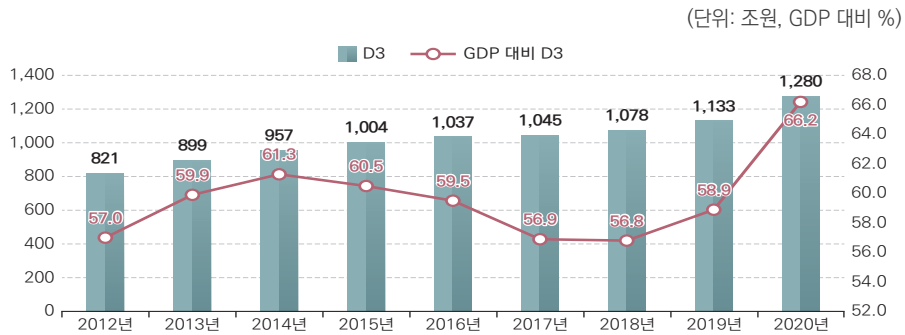
라. D3 분석

1) 증감분석

2020년의 D3는 1,280조원(GDP 대비 66.2%)으로 전년 대비 147조원(7.3%p) 증가함. D3에서는 비금융공기업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주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증감 금액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 3.2조원 증가, LH 3.6조원 증가, 한국가스공사 2.9조원 감소 등으로 구성됨

D3의 GDP 대비 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다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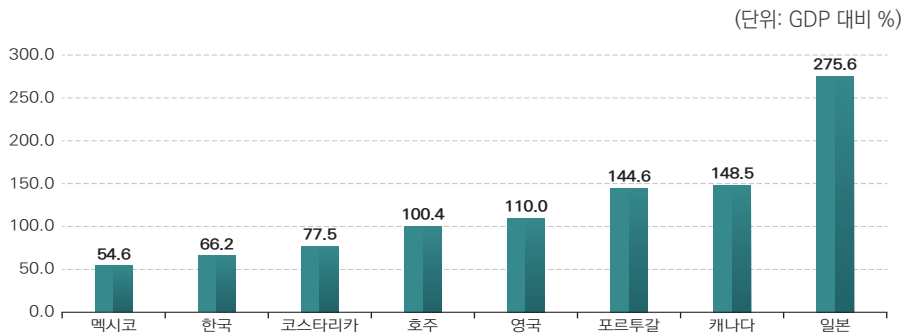
그림7 D3의 현황 및 추세 분석



2) 국제동향

한국의 D3는 OECD에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8개국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8 D3의 국제 비교



출처: OECD.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02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및 결산 일정

가.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50개 기관을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1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6	36	-			
■ 시장형	16	16	-			
■ 준시장형	20	20	-			
② 준정부기관	95	94	△1			
■ 기금관리형	13	13	-			
■ 위탁집행형	82	81	△1		△1	
③ 기타공공기관	218	220	+2	+3	△1	
계	349	350	+1	+3	△2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결과
신규(+3)	복지부	(재)한국보건건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산업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산업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해제(△2)	문체부	아시아문화원	지정 해제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기관의 장, 사원총회 등의 승인 의결로 확정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K-IFRS에 따라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 따라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 3월 말까지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준정부기관(공기업 중 사원총회 의결기업 포함)은 확정된 결산서를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주무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승인·확정하여 5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감사원 결산 검사결과(7월 31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8월 20일)하여야 한다.

표2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일정 요약

결산서 제출	결산서 승인	감사원 제출	감사원 → 기획재정부 송부	국회 제출
2월 말	3월 말	5월 10일	7월 31일	8월 20일





공익법인회계 동향



• 「2020 공익법인 재무 현황」 발간

01 「2020 공익법인 재무 현황」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0회계연도 공익법인의 재무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를 발간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0회계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20 공익법인 재무현황

문 장 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주 소장
 박 용 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팀장
 최 공 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외제사
 이 주 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원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국세청에 공시해야 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서류를 분석하여 공익법인의 재무현황을 파악하였다.

2021년에 공시한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¹⁾를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공익법인의 99%(총 11,102개 기관 중 11,026개)가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과 2월에 해당함으로써, 본 자료에서는 2020 공익법인 재무정보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0년 12월과 2021년 2월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1) 본 자료 분석되는 2019년 공익법인 재무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시스템」에서 2021년 2월 24일 조회된 자료이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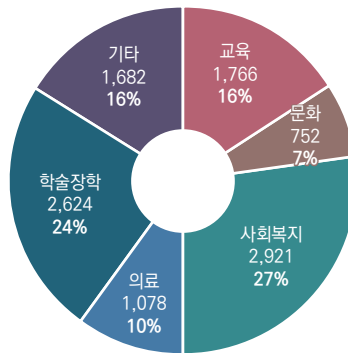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는 국공무연속 회계기준, 예산 연구보고서 및 결산과 재정통계 산출-분석 보고서 등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주요 보고서 중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1. 공익법인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 사업유형은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로 구분되고 있으며 2020년 공익법인의 사업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림1 2020년 사업유형별 공익법인 현황

(단위: 개, %)



2020년 공익법인은 총 10,823개¹⁴⁾로 사회복지 분야가 2,921개(27.0%)로 가장 많고, 학술장학(2,624개, 24.2%), 교육(1,766개, 16.3%) 분야 순으로 차지함¹⁵⁾

2. 공익법인 자산·부채 현황

가. 공익법인 자산·부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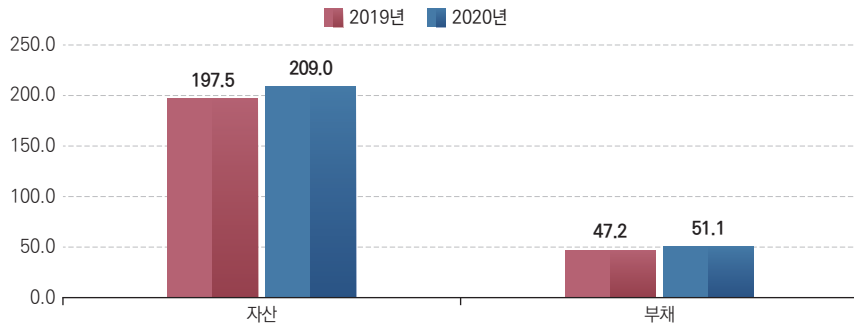
2019년과 2020년 공익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음

14) 공공기관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자산, 수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일반 공익법인과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2020년 기준 189개).

15) 2019년 공익법인은 총 10,486개로 사회복지 분야가 2,783개(26.5%), 학술장학 2,563개(24.4%), 교육 1,747개(16.7%), 기타 1,603개(15.3%), 의료 1,076개(10.3%), 문화 714개(6.8%)이다.

그림2 공익법인 자산·부채 현황

(단위: 조원)



2020년 공익법인 총자산은 209.0조원으로 전년 대비 11.5조원(5.8%)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51.1조원으로 전년 대비 4.0조원(8.4%) 증가하였고, 2020년 신규 공시한 공익법인(1,002개)의 자산규모 효과(3.7조원)로 전체 공익법인의 자산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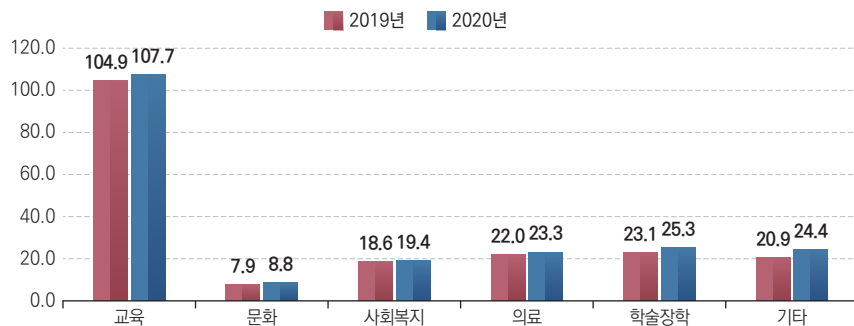
나. 공익법인 자산 현황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자산은 교육 분야가 107.7조원(2019년 104.9조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의 공익법인 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기타 분야 공익법인의 경우 2020년에 신규 공시한 공익법인의 자산이 2.0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그림3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자산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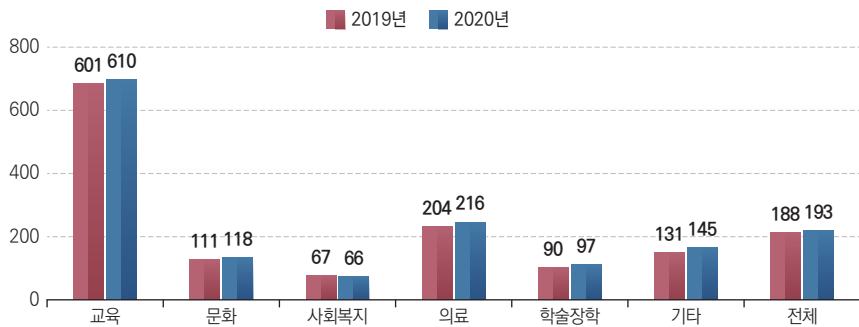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평균 자산은 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2.5%)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공익법인 평균 자산이 증가하였음

교육 분야 공익법인은 학교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비중이 높아 평균 자산이 610억원으로 가장 크며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자산은 66억원으로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이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음

그림4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자산 평균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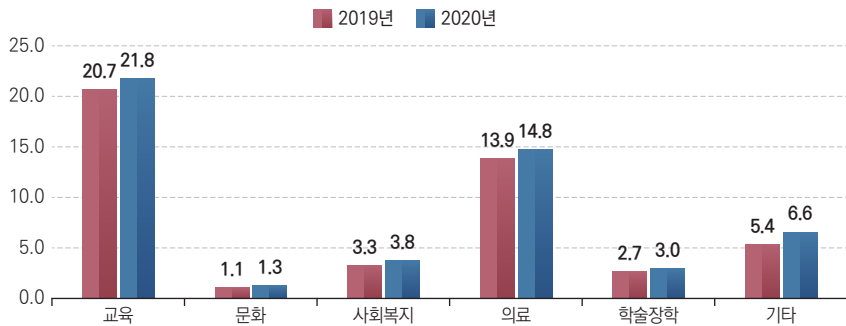


다. 공익법인 부채 현황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부채는 교육 분야가 21.8조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의 공익법인 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그림5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부채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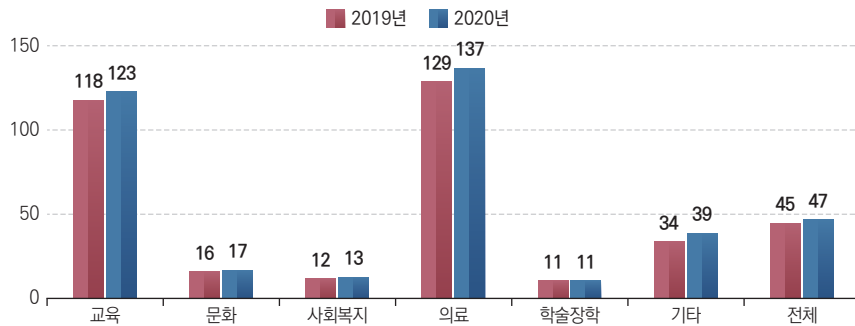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평균 부채는 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5.0%) 증가하였으며, 모든 분야의 공익법인 평균 부채가 증가하였음

의료 분야 공익법인은 장·단기차입금의 영향으로 평균 부채가 137억원으로 가장 크며 교육 분야 공익법인은 등록금선수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영향으로 평균 부채가 123억원으로 규모가 큼

반면에 학술장학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부채는 11억원으로 부채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6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부채 평균 현황

(단위: 억원)



3. 공익법인 수익·비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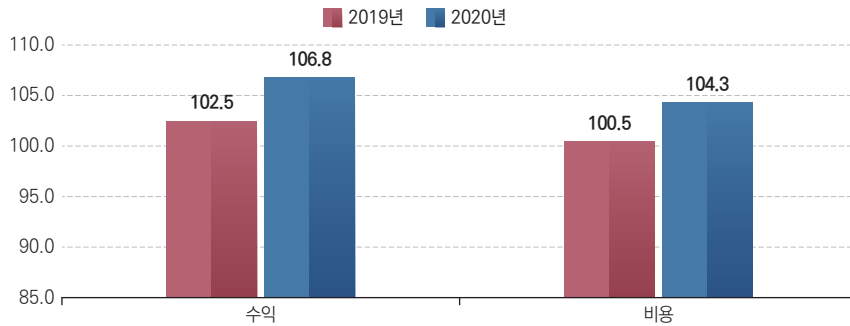
가. 공익법인 수익·비용 총괄

2019년과 2020년 공익법인의 수익 및 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공익법인 총수익은 106.8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원(4.2%) 증가하였으며, 총비용은 104.3조원으로 전년 대비 3.8조원(3.8%) 증가함

그림7 공익법인 수익·비용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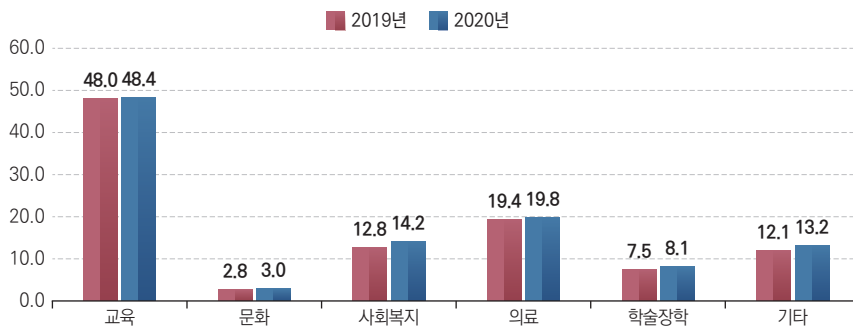


나. 공익법인 수익 현황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수익은 교육 분야가 48.4조원으로 가장 높은 편이며 모든 분야의 공익법인 수익이 증가하였음

그림8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수익 현황

(단위: 조원)



2020년 신규 공시한 공익법인(1,002개)의 수익 효과(1.3조원)로 전체 공익법인의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와 기타 분야 공익법인의 보조금수익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보조금이 늘어난 결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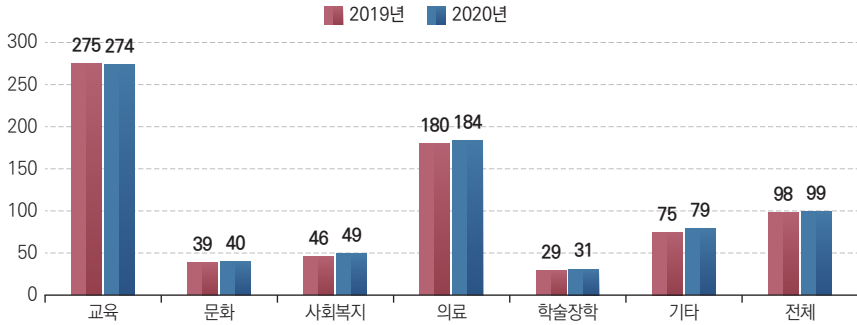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평균 수익은 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0.9%)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 수익은 감소하였고 그 외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 수익은 증가하였음

교육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 수익이 274억원으로 가장 크며 학술장학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 수익이 31억원으로 가장 작음

교육 분야와 의료 분야 공익법인은 등록금수익, 의료수익 등 기타수익의 영향으로 평균 수익의 규모가 큰 편임

그림9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수익 평균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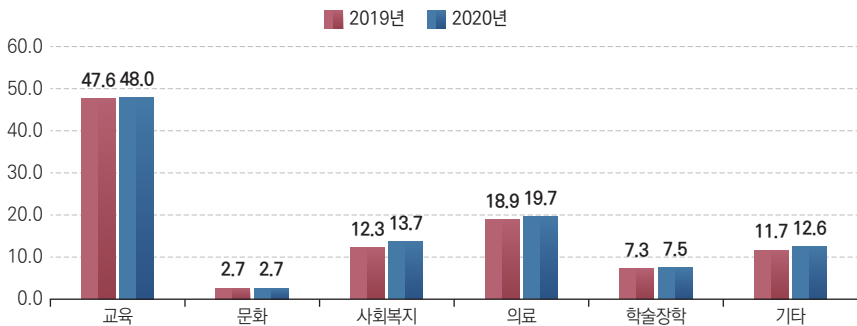
다. 공익법인 비용 현황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비용은 교육 분야가 48.0조원으로 가장 높은 편이며 모든 분야의 공익법인 비용이 증가하였음

사회복지와 기타 분야 공익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늘어난 효과로 사회복지와 기타 분야 공익법인의 비용이 증가하였음

그림10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비용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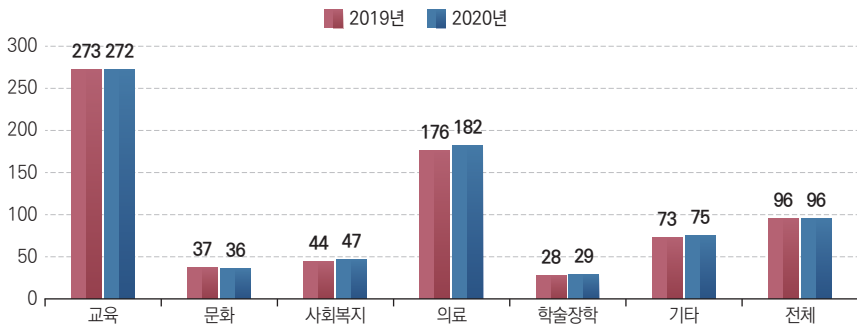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평균 비용은 96억원으로 전년 대비 0.5억원(0.5%) 증가하였으며, 교육, 문화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 비용은 감소하였고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 비용은 증가하였음

교육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 비용이 272억원으로 가장 크며 학술장학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 비용이 29억원으로 가장 작음

그림11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비용 평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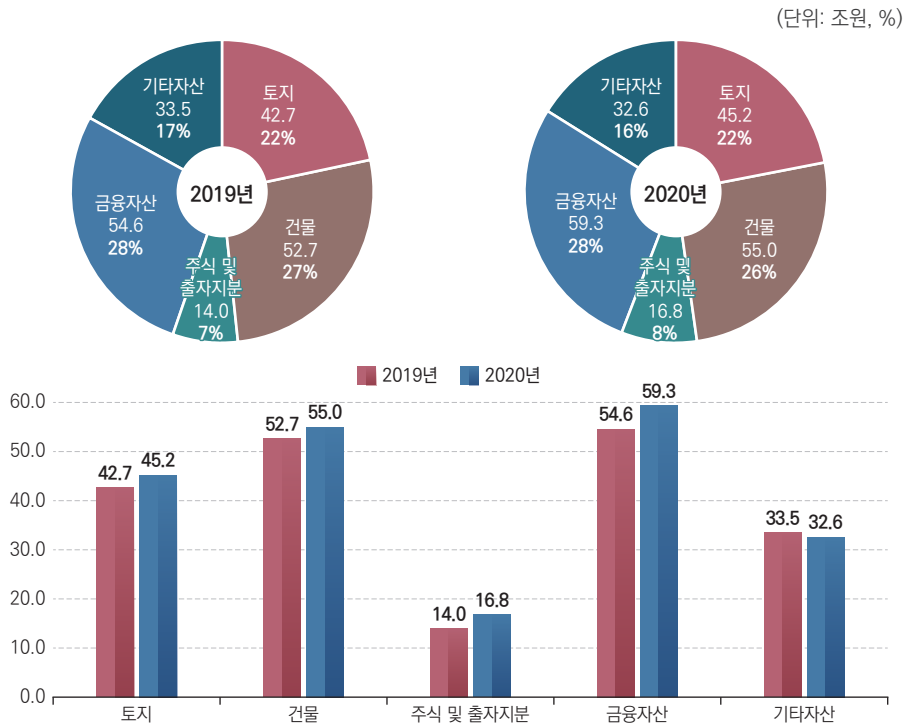
(단위: 억원)



4. 공익법인 자산 세부 구성 현황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된 공익법인의 자산은 토지, 건물, 주식및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총자산(209.0조원) 중 금융자산이 59.3조원(28%)으로 가장 큰 편이며, 건물(55.0조원, 26%)과 토지(45.2조원, 22%) 등 유형자산도 비중이 높은 편임

그림12 공익법인 자산 세부 구성 현황



사업유형별 자산 세부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 의료 분야 공익법인은 학교와 병원, 요양원 등 각종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토지와 건물의 비중이 높음

학술장학 분야 공익법인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으로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 원천이 되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음

표1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자산 세부 구성 현황

(단위: 조원)

사업유형	토지	건물	주식및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산 총계
교육	29.8	36.0	3.7	22.6	15.7	107.7
문화	0.9	0.7	2.8	2.9	1.6	8.8
사회복지	3.2	4.6	2.6	6.3	2.7	19.4
의료	5.9	8.5	0.1	2.6	6.2	23.3
학술장학	2.5	1.6	6.1	13.3	1.8	25.3
기타	2.9	3.7	1.5	11.6	4.7	24.4
합계	45.2	55.0	16.8	59.3	32.6	2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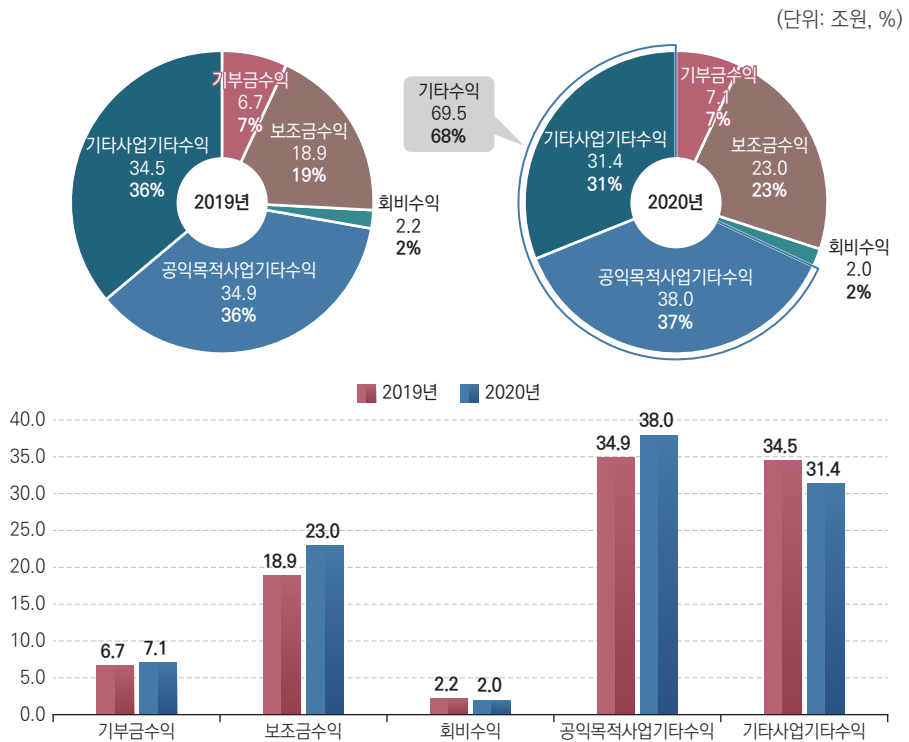
주: 표 안의 수치는 세부 내역의 금액이며, 막대그래프는 사업유형별로 자산총계 대비 세부 내역의 비중(%)을 표시함



5. 공익법인 사업수익 세부 구성 현황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된 공익법인의 사업수익은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되며 총사업수익 101.6조원 중 기타수익이 69.5조원(68%)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보조금수익(23.0조원, 23%)도 많은 부분을 차지함

그림13 공익법인 사업수익 세부 구성 현황



사업유형별 사업수익의 세부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 분야 공익법인의 경우 등록금수익으로 인해 공익목적사업기타수익이 크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영향으로 의료수익이 반영된 기타사업기타수익의 비중도 높음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분야 공익법인은 의료수익의 영향으로 공익목적사업기타수익과 기타사업기타수익의 비중이 높음. 공익법인마다 의료수익을 공익목적사업기타수익으로 구분하거나 기타사업기타수익으로 구분한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 의료 분야 공익법인의 비교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로 작용함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은 다른 분야보다 기부금수익의 비중이 높아 외부 지원에 의존함을 알 수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 중 대형병원(삼성, 아산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있어 기타수익의 비중이 높게(삼성, 아산병원 운영 공익법인의 기타수익이 4조원을 차지함) 나타남

문화 분야 공익법인에는 지자체운영 문화재단이 다수 있어 지자체로부터의 보조금수익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학술장학 분야 공익법인에는 산학협력단이 있어 보조금수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2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사업수익 세부 구성 현황

(단위: 억원)

사업유형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공익목적사업 기타수익	기타사업 기타수익	사업수익 총계
교육	10,811	86,182	15,888	147,338	195,495	455,714
문화	5,345	15,324	135	5,372	2,514	28,689
사회복지	25,742	36,554	1,359	64,138	9,437	137,230
의료	790	5,692	115	115,039	68,751	190,387
학술장학	7,155	35,103	203	15,890	16,292	74,643
기타	21,421	51,191	1,990	32,625	21,641	128,868
합계	71,263	230,046	19,691	380,402	314,130	1,015,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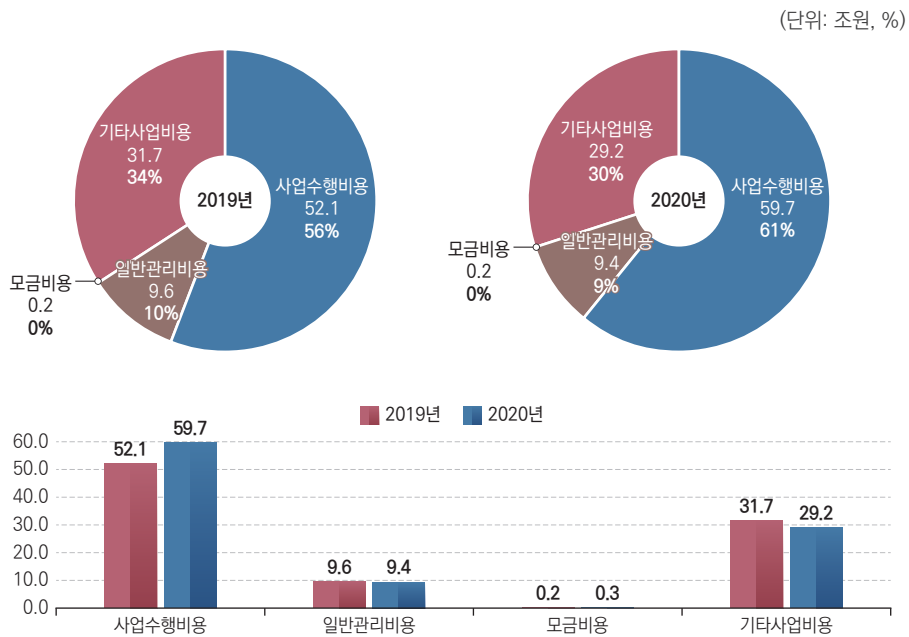
주: 표 안의 수치는 세부 내역의 금액이며, 막대그래프는 사업유형별로 사업수익 총계 대비 세부 내역의 비중을 표시함

6. 공익법인 사업비용 세부 구성 현황

가. 공익법인 사업비용 세부 현황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된 공익법인의 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¹⁶⁾되며 총사업비용 98.5조원 중 사업수행비용이 59.7조원(61%)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기타사업비용(29.2조원, 30%)도 많은 부분을 차지함

그림14 공익법인 사업비용 세부 구성 현황



16)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타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말한다.

사업유형별 사업비용 세부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 분야 공익법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분야 공익법인의 기타사업기타수익(의료수익 등)의 비중이 높은 만큼 기타사업비용의 비중이 높은 편임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은 기부금수익이 높은 만큼 기부금모금을 위한 모금비용의 비중이 다른 분야 공익법인보다 높고, 기타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적고 공익목적사업에 많이 치중하여 사업수행비용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3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사업비용 세부 구성 현황

(단위: 억원)

사업유형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기타사업비용	사업수익 총계
교육	220,373	41,458	354	184,554	446,739
문화	13,472	5,083	37	1,857	25,448
사회복지	112,264	10,091	1,349	8,427	132,130
의료	102,716	22,527	20	62,940	188,204
학술장학	51,628	5,188	113	13,269	70,198
기타	91,551	9,206	688	20,808	122,253
합계	597,004	93,553	2,560	291,855	984,971

주: 표 안의 수치는 세부 내역의 금액이며, 막대그래프는 사업유형별로 사업비용 총계 대비 세부 내역의 비중(%)을 표시함

나.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성격별 구분 현황

공익목적사업비용을 비용의 성격에 따라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¹⁷⁾할 수 있음. 전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비용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인력비용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을 보아 공익목적사업 운영에 많은 인력이 사용됨을 알 수 있음

17)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 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입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표4 2020년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성격별 구분 현황

(단위: %)

구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공익목적사업비용 합계
분배비용	17.6%	0.0%	0.0%	17.6%
인력비용	34.6%	7.5%	0.1%	42.2%
시설비용	5.9%	2.1%	0.0%	8.0%
기타비용	28.1%	3.9%	0.3%	32.2%
합계	86.1%	13.5%	0.4%	100.0%

주: 전체 공익목적사업비용 대비 각 세부항목의 비중을 나타냄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비용 성격별 구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수행 비용 중 인력비용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사회복지 분야 공익목적사업 운영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추정됨

또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지원 등이 있어 분배비용의 비중도 전체 공익법인 대비 높음을 알 수 있음

표5 2020년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성격별 구분 현황

(단위: %)

구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공익목적사업비용 합계
분배비용	20.0%	0.0%	0.0%	20.0%
인력비용	37.5%	5.8%	0.4%	43.7%
시설비용	5.4%	0.7%	0.0%	6.1%
기타비용	27.9%	1.6%	0.7%	30.2%
합계	90.8%	8.2%	1.1%	100.0%

의료 분야 공익법인은 병원 운영의 대부분이 의료진의 인력비용으로 투입됨을 파악할 수 있음

표6 2020년 의료 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성격별 구분 현황

(단위: %)

구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공익목적사업비용 합계
분배비용	0.9%	0.0%	0.0%	0.9%
인력비용	49.1%	10.9%	0.0%	60.1%
시설비용	5.2%	1.3%	0.0%	6.5%
기타비용	26.8%	5.7%	0.0%	32.6%
합계	82.0%	18.0%	0.0%	100.0%

학술장학 분야 공익법인은 장학금 지급 등으로 인해 분배비용의 비중이 높으며, 산학협력단이 있어 연구 관련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인식되어 기타비용의 비중도 높은 수준을 차지함

표7 2020년 학술장학 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성격별 구분 현황

(단위: %)

구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공익목적사업비용 합계
분배비용	27.1%	0.0%	0.0%	27.1%
인력비용	20.3%	3.7%	0.1%	24.0%
시설비용	2.8%	2.0%	0.0%	4.8%
기타비용	40.5%	3.4%	0.1%	44.1%
합계	90.7%	9.1%	0.2%	100.0%

7. 요약 및 향후 개선방안

가. 요약

우리나라 공익법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의 총자산은 209.0조원으로 전년 대비 11.5조원(5.8%)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106.8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원(4.2%) 증가하였음

사업유형별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교육 분야가 610억원으로 가장 크며, 사회복지 분야의 평균 자산규모는 66억원으로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이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음

사업유형별 공익법인의 평균 수익규모도 교육 분야가 274억원으로 가장 높은 편이며, 학술장학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 수익이 31억원으로 가장 낮음

공익법인의 자산 세부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209.0조원 중 금융자산이 59.3조원(28%)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건물(55.0조원, 26%)과 토지(45.2조원, 22%) 등 유형자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함

공익법인의 사업수익 구성을 살펴보면 총사업수익 101.6조원 중 기타수익이 69.5조원(68%)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기부금, 보조금 등 외부지원보다 공익법인 자체사업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 향후 개선방안

공익법인의 사업수익 구분이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만 별도로 구분하고 나머지를 기타수익으로 구분하여 수익 중 많은 부분이 기타수익으로 표시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러한 현상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보다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것처럼 정보이용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음. 실제로는 교육 분야의 등록금수익, 의료 분야의 의료수익이 기타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운영성과표를 분석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이외에도 공익법인의 주요 수익(등록금수익, 의료수익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 분야 공익법인의 경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있어 병원사업을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기타사업기타수익과 기타사업비용이 높게 나타나며, 의료 분야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병원사업을 기타사업으로 구분한 경우가 있음

병원사업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세법 기준으로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상 구분 이 아닌 세법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 경우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공익법인에 따라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달리 구분되어 공익법인의 재무정보 비교 가능성이 저하됨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사례 등을 통해 공익법인이 일관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국가회계
재지통계



오피니언



- 공공회계의 회계책임성 확인을 위한 육하원칙

OPINION 공공회계의 회계책임성 확인을 위한 육하원칙

김완희 교수(가천대학교 경영대학)



선글라스 제조회사에서 일하던 에드윈 랜드 박사는 사진을 찍은 후 바로 볼 수 없는 낡은 필름에 영감을 얻어 '폴라로이드'라는 즉석 카메라를 개발한다. 이렇듯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하고 좋은 질문은 세상을 바꾼다.

국민의 혈세, 공공요금,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소위 회계책임성(accountability)의 제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 기업에는 주주의 투자금에 대한 최종 과실인 '당기순이익'이라는 단일의 시금석(bottom line)이 존재한다. 그런데 납세는 법률에 의한 강제적 행위이고, 세금에 상응하는 권리가 보장되지도 않는 비대응성의 특성이 있다. 또한 공공성이라는 것은 수익성처럼 쉽게 정의될 수 없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정치적 조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회계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소위 기사 작성의 기본이 되는 육하원칙(5W1H)을 원용하여 몇 가지 질문을 구성해보자.

첫째, “언제(When) 내가 낸 세금이 사용되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금년에 낸 세금이 금년에 모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세수가 넉넉하고 쓸 곳이 제한적이라면 내년 혹은 향후 미래를 위해서 여유자금을 보관할 수도 있다. 또한 내가 낸 세금이 그 해에 소모성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도로, 항만 등 미래 상당 기간에도 사용될 수 있는 자산축적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재무상태표상에는 자산 2,487조원, 부채 1,982조원이 기록되어 있다. 자산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희생, 부채는 반대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요약할 때 그 차액인 순자산 505조원은 현재까지 나라 살림살이 결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정체, 자연재해 속출 등 향후 재정건전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결과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세대간회계(generation accounting) 정보가 본격적으로 산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누가(Who), 어디에(Where) 세금을 사용하였는가?”이다. 현재도 공적 자금의 집행 주체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결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인지결산정보를 통해서 양성평등을 위한 세금 사용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사업 주체별로 정보를 요약한 것일 뿐, 재정집행 전 과정에서 자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되었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득계층, 세대별 사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세금을 가지고 무엇(What)을 하였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답이 가능하다. 우선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비 등의 다양한 품목별 사용 정보는 당연히 제공되고 있다. 또한 복지, 교육, 국방 등 국가의 공적 기능별 사용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무제표에는 소위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하는 주요 정책별 사용 정보도 집계하는 등 우수한 답을 내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큰 영향력이 있는 사건에 대한 재정지원 및 향후 전망 등은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어떻게(How) 세금을 사용하는가?”이다. 국가가 세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직접사업, 보조사업, 용자사업, 출연 및 출자, 민간투자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무제표는 해당 사업별 집행액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별로 가

장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선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초기에 과도한 최소운영수익보장 조건 등으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였던 시행착오 및 후속조치에 대한 실적들은 국민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왜(Why) 세금을 사용하는가?”이다. 정책의 목적 및 이의 달성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결산서는 성과보고서에 주요 정책사업의 핵심 성과지표 및 그 달성도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와 사업비를 연계하지 않아서 사업의 효율성을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정책사업의 명칭, 성과지표 등이 변경되고 이 과정에서 과거 실적과의 연결성이 상실되어 시계열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복잡하고 정교한 회계방식을 국가회계에 적용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회계기준의 시의성 있는 개정, 민간 회계전문직의 특별채용, 국가회계전문 지원기관의 확충 등 작성자 입장에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결산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활용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위에 제시한 질문을 납세자인 국민,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 여론의 조성자인 언론이 제기하고 국가는 이에 충실히 답할 때 국가회계 본연의 기능이 작동될 것이다.

아울러 몇 가지 추가적인 제안을 하면 첫째, 국가결산서의 첫 장에 대통령 혹은 경제부총리가 서명한 대국민 서한을 포함하여 회계책임성의 실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국민 서한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하며 재정집행 결과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을 포함하고 인포그래픽스 등을 활용하여 핵심 정보를 즉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익법인 등 공공부문의 회계 기준 및 관련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총괄연구지원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다양한 회계주체 간 회계용어, 재무제표의 양식, 회계처리 기준 간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집행과 관련한 IT 시스템은 각 주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산출되는 재정정보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d-Brain, e-호조, 에듀파인 등 산재해 있는 시스템들 간 재정정보를 연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센터 동향



- 제1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도 국가회계재정통계 사업계획 수립 · 보고

제1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도 국가회계재정통계 사업계획 수립·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월 9일에 센터의 2022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평가지표 및 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2022년 제1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의 정책사업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센터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번 자체평가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위원장인 심재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주재로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 박세환 상임위원(한국회계기준원), 지현미 교수(계명대학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참석하고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서면으로 참여하였다.

센터는 2022년 사업계획을 수립·보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사업계획은 전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 및 평가목표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다.

가.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시 센터의 인력부족 및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물리적인 “양”보다는 “질”에 더 집중하고 무리한 정량목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 회계기준 개선과제 발굴 건수는 인력구조 및 기존 업무 대비 지나치게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
- 내부 연구진 감소를 고려하여 연구수행 및 대외발표 건수 등은 단순발표 건수를 늘려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등재지 논문발표 등과 같은 질을 고려한 목표로 개선이 필요

나. 센터의 전체적인 전략 수립 및 업무의 우선순위 등 전반적 사업검토가 필요

다.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수행 검토

라. 국가결산 시 증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점검이나 디브리인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명확하게 제시

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적용하는 IFRS에서 다루지 않는 공공부문 특유의 이슈를 검토하여 회계사무규칙을 보완하는 방안 마련

바. 신설되는 공공기관 회계교육 사업이 기존 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진행

센터는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한 개선계획을 토대로 2022년 성과목표를 수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차년도 연구기관평가 및 정책기여도 평가 시 객관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회계
재지통계



세미나



-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 주 제: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 일 시: 2022년 3월 15일(화) 13:30~18:00, 2022년 3월 16일(수) 9:30~18:00
- 장 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3층 대강당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3월 15일과 3월 16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 중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윤영훈 초빙 연구위원과 양은주 초빙연구위원이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과제에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해당 과제는 7월 중간보고회, 10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가. 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GDP 대비 266%로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하고, 국제비교 시 가계부채(107%)는 높은 편이며, 정부부채(46%)는 낮은 편임
- 2008년 이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부부채는 낮은 증가율을 보임
- 민간부채에 대한 공적부문의 보증은 경제위기 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공공부문의 민간부채에 대한 보증은 공공부문 부채에 계상되지 않지만, 민간부문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일반정부의 재정통계 작성 국제기준(GSFM)에서는 민간부채의 정부보증에 대한 기대이익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함

- 정부보증금액 전체를 부채로 취급하지 않지만,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우발성에 대한 총량자료를 부기사항으로 기록해야 함
- 현재 가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공공부문 보증 등 공공부문의 민간부채에 대한 보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나. 보증시장 현황

☞ 우리나라의 보증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이며,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보증시장의 보증잔액은 2013년 844조원에서 2020년 6월 기준 1,384조원 수준으로 증가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규모가 최근 급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잔액은 2010년에 92.4조원에서 2020년 459.8조원으로 약 5배가량 증가

☞ 이전까지 제한된 영역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던 공적 보증기관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외형을 확대하고 있음

- 공적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임

- 공적 보증기관은 보증산업 내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2020년 6월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국내 보증시장의 주요 3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426.6조원), 서울보증보험(357.5조원), 주택금융공사(103.9조원)임
-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0.8%, 서울보증보험이 25.8%, 주택금융공사가 7.6%이며, 3개 기관이 64.8%를 차지함

다. 국가결산보고서의 보증 현황

- 국가결산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총세입·총세출 결산과 68개 기금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결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보증 관련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신용보증기금
 -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림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개인보증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신용보증
 - 사업자보증은 주택의 건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신용보증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신용보증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항만, 도로, 철도, 학교 등의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보증 지원

- 근로복지진흥기금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실업자)가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계보호 지원을 하고 있음

- 무역보험기금
 -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입자가 수출입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환어음 매각에 따른 수출금융채무를 지는 경우 해당 수출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신용위험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제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정책소외 등급인 신용등급 4~5등급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여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표1 보증 회계실체별 지급보증금액(2020년)

(단위: 십억원)

구분	당기 말
신용보증기금	67,153
기술보증기금	25,70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44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11,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10
근로복지진흥기금	561
무역보험기금	2,06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
합계	230,940

자료: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보증충당부채는 「보증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보증잔액에 대하여 예상대위변제율과 예상손실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증충당부채로 계상

- 정부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

☛ 「보증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 대위변제한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인식

- 구상채권의 평가는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 이와 별개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

- 2020년 말 현재 보증채무는 12.5조원
- 정부가 2006년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회수함에 따라 보증채무 규모는 2008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보증채무 규모가 증가
- 2010년 학자금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신규보증이 발생한 이후 2011년까지 증가하던 보증채무 규모는 각 보증채무의 상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12.5조원 수준으로 감소

라. 공공부문 보증 관련 공시 기준

■ 국가회계기준

-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지침 중 보증 관련 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별도로 기재하고 있으며 크게 두 부분에서 별도로 작성됨
 - 첫 번째는 '3. 장기충당부채, ④ 기타장기부채, <1. 보증충당부채>'에서 보증 관련 사항을 작성하며,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고 있는 보증사업을 주요 보증위험 별로 기술하고 보증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과 대위변제율, 대손율 등의 재무적 수치의 산출방법을 기술
 - 두 번째는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④ 지급보증에서'에서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채무 관련 사항을 작성하며, 보증채무는 「국가재정법」 상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

■ 재정통계기준

- PSDS(공공부문 부채통계)에서는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국가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부기사항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증규모가 포함됨
 - 공공부문의 보증현황은 보증을 제공받는 기관이 어느 제도부문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공공, 민간, 국외로 구분하여 표시
- 보증채무에 대한 국제지침에서 보증(guarantee)은 명시적 우발부채(explicit contingent liabilities)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PSDS에서는 주로 표준화보증(standardized guarantee scheme)이 해당됨
 - '표준화보증'은 유사한 성격의 소액용자에 대해 대량 발생하는 보증을 총칭하는 것으로 명시적 우발부채에 포함되며, 통계적으로 개별계약과 상관없이 부채로 처리함

-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공공부문 부채 산출 시 정부보증채무, 공기업 지급보증 등 대부분의 보증채무가 자동적으로 부채에 포함되지만, 민간부문에 대한 지급보증은 우발부채로서 다른 부채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부기를 통해 표시하고 있음

마. 재정위험 추정의 필요성

- 많은 국가의 정부와 의회에서는 정부 재정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수단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정부보증임
- 정부보증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 지원 수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원 당시에는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반면, 경제 상황 등 외부적 요인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직접 지출에 비해 그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음
- VaR(Value at Risk)는 어떤 신뢰수준하에서 특정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최대 금액으로 정의
- 공공부문 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위험의 측정지표로서 VaR은 만기시점에 보증재원의 크기를 초과하는 순보증채무금액의 확률분포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음
- 「보증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가회계실체는 보증약정 등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함
-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준비금과 미래 손실 예상액에 대한 별도의 충당부채를 계상할 수 있음
- 보증충당부채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지만, 이에 대한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잔액에 대하여 신용위험, 경험손실률 및 예상손실률 등의 기준을 적용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쓸 수 있음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 주 제: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 일 시: 2022년 3월 15일(화) 13:30~18:00, 2022년 3월 16일(수) 9:30~18:00
- 장 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3층 대강당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3월 15일과 3월 16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 중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양은주 초빙 연구위원과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이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과제에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해당 과제는 7월 중간보고회, 10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가.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사회기반시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증대

- 사회기반시설은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남
 - 자산관리 관점의 사회기반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중요성 부각
-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성은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계획, 설계시점뿐만 아니라 사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및 수선비용, 철거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을 제정하여 유지관리 및 수선비용에 중점을 둔 정책 마련

■ 현행 기반시설 관리체계에서 사용종료 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미비

- 사용종료 기반시설에 대하여 개별적·산발적으로 관리
- 다수의 폐도로·폐선·유휴항만 등이 철거비용에 대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방치
 - 일부 사용종료 기반시설의 경우 재개발사업·유휴부지 활용사업을 통해 활용되고 있으나 관리주체별로 활용수준이 상이하며,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용 방식은 상당히 제한적임
- 현행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관련 회계처리규정 미비
 -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에는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복구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 존재

나. 사회기반시설 관리체계 현황

■ 사회기반시설 개요

-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함
 - 국가회계기준에서는 8종(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및 국가어항) 자산을 사회기반시설로 규정
- 적용 법률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및 범위가 상이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53개 항목으로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교통(10), 공간(5), 유통·공급(11), 공공·문화체육(9), 방재(8), 보건위생(7), 환경기초(4)의 총 54종으로 규정
- 「기반시설관리법」에서는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54종 중 장부가액이 중요하고 내용연수가 길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15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

☒ 사회기반시설의 법률체계

- 국유재산관리체계는 크게 「국유재산법」과 각 시설별 개별법으로 구성
 -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각 시설별로 도로법, 하천법 등 특별법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러한 특별법들은 특정 국유재산의 직접 목적 또는 용도나 그 형태 등에 따라 관리·처분기관, 관리·처분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개별법은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에 우선하여 적용됨(「국유재산법」 제4조)

표1 사회기반시설별 개별법

SOC 유형	세부내역	관련 법령
도로	일반국도/고속국도	도로법
철도	일반철도/광역철도/고속철도	철도사업법
공항	공항시설	항공법
댐	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수도	광역상수도	수도법
하천	국가하천	하천법
항만시설	지정항만	항만법
어항	국가어항	어촌어항법

☒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체계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소유이나, 대부분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

- 국유재산관리기관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리청(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구분

다. 사용종료 기반시설 개념 및 관리체계

■ 사용종료 기반시설 개요

- 기반시설의 사용종료란 노후화, 기능이전, 시설통폐합 등의 사유로 인해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함
 - ‘유휴 기반시설’, ‘유휴 국유재산’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
- 기반시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이외에도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사용종료 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필요
 - (도로 및 철도) 고속화·복선화에 따른 신규 철도의 건설 또는 선로의 개량으로 인해 기존 선로의 폐선
 - (항만) 선박의 대형화, 화물패턴의 변화, 신항만 개발이전, 기존 항만의 노후화 등 해운·물류 환경변화로 인해 항만으로서의 기능 상실
 - (댐)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환경적 편익을 고려한 댐 철거,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댐 기능 상실

■ 사용종료 기반시설의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 사회기반시설은 각 중앙관서에서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므로 처분이 어려움
 - 행정재산은 그 자체로 매각, 양여 등이 불가하므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야 처분 가능
 -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에 위임

-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사실상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경제적 효익은 소실되지만, 국유재산의 용도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현재 대부분의 유희기반시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

국가회계기준상 사용종료 기반시설의 회계처리

- 현재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사용종료된 기반시설 및 관련 복구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국가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종류에는 매각, 교환, 양여, 유상관리전환, 현물출자, 멸실, 신탁, 기타처분이 있음

라. 국내외 관련 회계기준 분석

1. 정부회계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 IPSAS 17, Property, Plant, and Equipment(유형자산)에서 해체 및 복구 관련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
- IPSAS 19,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통해 복구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사후처리 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 SFFAS 6 Accounting fo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복구비용에 관한 규정 제시
 - Chapter 4 Cleanup Costs(정화비용)에서 정화비용의 범위, 인식기간, 비용추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 제시

미국 지방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Statement No. 83 Certain Asset Retirement Obligations(자산처분 의무)에 대하여 2016년에 규정하여 2018년부터 적용
 - 자산처분 의무(Asset Retirement Obligation, 이하 ARO)란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가 만료된 후 최종 처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함
 - ARO에 대한 인식, 초기 측정 및 후속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시

2.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 K-IFRS 제1016호(유형자산)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원가를 인식할 때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도록 규정
-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는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1호에서는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이 변경되는 경우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제공

미국 기업회계기준(US GAAP)

- SFAS 143(Accounting for Asset Retirement Obligations)에서 자산처분 의무(ARO)에 관한 규정 제시
 - GASB Statement No. 83와 유사

마. 사회기반시설 사후관리체계 개선의 쟁점 및 이슈

■ 사회기반시설의 복구의무 여부

- 기반시설별로 복구의무가 있는 사회기반시설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자산 유형별 복구의무의 범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충당부채로서의 인식 여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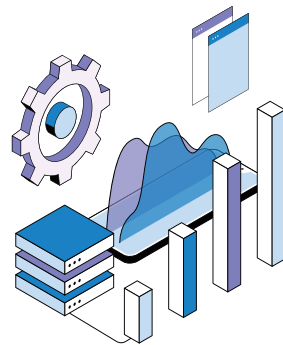
- 기존 회계기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이 충당부채 인식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용산정체계 설정

- 복구비용의 경우 미래처분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자산구입 시점에서 합리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용산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당 비용이 인식기간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재원조달 방안 마련

- 기존 성능개선충당금 및 원전해체충당금 등에서 적용한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



국가회계
재지통계



공지사항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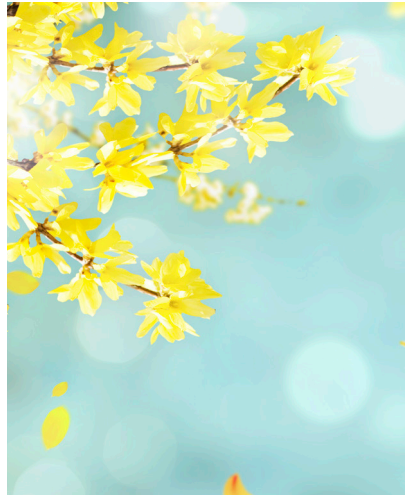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